

인권정보자료실
R1.1.3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 호
(제201~300호)



1995. 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합본 Ⅲ 호 1995. 4

인권정보자료실
R1.1.3

인권운동사랑방



합세웅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합세웅, 강기훈 공대위)의 합세웅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합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구를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또 합 신부는 세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진 전민련 업무일지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유서와 동일'하다고 감장해 놓고도 나중에 그 부분을 추궁당하자 여러사람이 썼음을 알고 감정했다고 증언한 점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강기훈 공대위는 이번 고발이 강기훈씨 사건의 책임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재심요건이 까다로운 사법절차에서 우선 강기훈씨 유조의 중대한 증거가 허위였음을 밝히는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28일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공직사회, 민간기업체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

단계를 밝혔다는 것이다. 김형영씨는 지난 91년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철씨의 유서필적과 강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을 함으로써 재판부가 강씨의 유서대필사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서 '지원여부 검토'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 해」 기조인정 재확인

외무부는 24일 정신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있어 「한국정신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에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대협에 회신해왔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지난 5일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해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건은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군대위안부 피해자간의 중재부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이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성안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분적으로는 비리의 사슬에서 벗어나 정의의 길을 추구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또한 일본의 민간위로금 지급안 반대 및 진상규명을 재촉하는 정대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가도록 요구했다고 밝히며, "정부차원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린바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무부는 또한 65년 체결된 한-일간 제협정시 책임자처벌문제는 다루지 않았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 발간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의 <인권하루소식>을 책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머리글로 실었습니다.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입니다.

합본1호와 동시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구독료를 10월 현재 10만원 이상 내주신 분에게는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우송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안에서 요약)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인권하루소식

94년 11월

(제276호 - 제297호)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베를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

93년 9월 발표되었던소위 일본 관련 '남매간첩 김삼석·김은주 사건'에 깊이 관계되었던 전 남누리 영상 대표 배인오(본명:백홍용,28세)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로 최근 2년간 활동했음을 폭로했다.

이 사실은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에서 지난 10월 29일자로 전국연합에 팩스로 보내온 양심선언 자료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배씨는 남누리 영상 대표로 재직중 창단 기념작품으로 91년 제작한 "이름없는 영웅"의 국내 상영이 어려워 미국의 한청련에 영화상영을 의논하기 위해 도미하였다 귀국한 직후인 92년 6월에 안기부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년여 동안 안기부의 지시로 미국과 일본을 수차례 왕래하면서 한청련과 조총련, 사민청과 조총련 등이 연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범민족대회 때는 안기부로부터 받은 북한의 영화를 상영하고, 또 북한의 영화와 북한 서적을 의도적으로 김삼석씨의 동생 김은주씨를 통해 한청련 등에 전달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지난 9월에는 김삼석씨 남매가 간첩으로 구속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그는 김삼석 남매 사건이 터진 이후 함께 일했던 당시 남누리 영상 제작부장의 증언과 재판 과정에서 그의 안기부 프락치 혐의가 확실하게 부각되자 한동안 잠적하였는데, 이때도 안기부에 의도적으로 피신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이후 안기부 과장의 지시에 의해 자신의 결백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장하며 다녔고, 올해 8월에는 독일 범청학련 사무국에 침투하여 한청련 등과의 연락관계 등을 탐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안기부의 프락치 활동을 한 자신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독일의 인권단체들과 녹색당의 도움을 얻어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고 자료에서 밝혔다.

한편, 그는 안기부의 프락치 활동으로 매월 약 100만원씩의 돈을 받았고, 주로 안기부 과장인 윤동환등의 안기부 요원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으며, 마포 불교방송국 근처의 오피스텔, 부천 등지의 안기부 안가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남한조선노동당지역당사건, 구국

전위사건 등이 안기부의 프락치 활동으로 이루어진 조작사건이며, 안기부의 프락치는 운동권 조직에 광범하게 침투해 있다고 자신이 듣고 경험한 바에 따라 폭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김삼석 남매 사건의 경우 작년 정기국회에서 안기부 예산의 축소가 예상되자 급박하게 조작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다음 게재)

「샘」 「노민문연」 석방기원의 밤 열려

청소년단체 「샘」과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사건의 구속자들 '석방기원의 밤'이 10월 28일 구로교회에서 「구속자 석방구로 영등포 대책모임」(공동대표 노은혜 등) 주최로 구속자 가족과 구로민중교회연합등 지역단체, 나우정밀 싸니전기노조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행사는 사건 보고, 서준식씨의 강연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을, 2부에서는 문화공연과 함께 구속자 석방을 기원하는 촛불의식을 가졌다.

◆ 공 판 안 내 ◆

- 11월1일(화)
 - 이창복, 국보법, 2시, 317호, 속행, 1단독
 - 안영민등(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8호, 3회, 합의25부
 - 김형욱,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2시, 418호, 속행, 합의4부
 - 송경숙, 국보법, 10시, 421호, 신건, 7단독
 - 김정미등, 국보법, 2시, 425호, 1회, 합의22부
- 11월2일(수)
 - 안재구·정화려등(구국전위 사건), 2시, 311호, 합의21부
 - 박화국(구국전위 사건), 2시, 425호, 3회, 합의22부
 - 신세규, 국보법, 10시, 424호, 신건, 9단독
 - 장석철, 국보법, 2시, 424호, 신건, 9단독
- 11월3일(목)
 - 문국진, 국가손배청구소송, 2시, 민사지법 559호, 5회
- 11월4일(금)
 - 박한상, 존속살인등, 10시, 311호, 8회, 합의23부
 - 이봉근, 국보법, 10시30분, 311호, 2회, 합의23부
 - 안병일(김일성주의청년동맹 사건), 10시, 421호, 신건, 8단독

◆ 행사 안내 ◆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 11월1일 오전 9시30분
장소 : 명동 가톨릭 회관 3층 천주교인권위 사무실
(☎ 777-0843)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256호-275호)

일일	호	면	기 사 제 목
10/1	256	1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 빈민장애인 삶 사진전,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
		2,3	인권하루소식 9월분 총목차(239호-255호)
10/5	257	1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문전박대 당하는 원진노동자, 재취업알선장도 소용없어 / 원진폐업후 취업자는 겨우 29명, 정부 말로만 "정부투자기관에 취업알선 노력"
		2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에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대회 /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 천주교인권위 '연례모임'
10/6	258	1	서울대 학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칙에 성폭력 규정을" /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미군 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2	KNCC장애인위, 일본장애시설등 방문, 한국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계기 되기를 / 9월22일 -10월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 성폭력방지위 위한 규정(안)
10/7	259	1	가난한 아이들의 꿈, 희망, '민들레의 합창', 서울공부방연합 /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없이 연행 해 긴급구속, 북한장학금 받은 혐의만 간접적으로 밝혀
		2	강기훈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다음주중 김형영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 사형폐지협, "흉악범죄 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 민가협 55차 목요집회 / "현중노조간부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민주노총 건설 방해의도"
		3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대위의 김형영씨에 대한 고발장(허위공문서 작성부분)
10/8	260	1	NGO한국위원회 제4차 세계여성대회 발전전략세미나, 동아시아 여성포럼 행동강령 준비 /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2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대위의 김형영씨에 대한 고발장(위증부분)
		3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국민은 납세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공공(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
10/11	261	1	'민들레의 합창' 어린이·교사·지역주민등 225명 출연, 제도교육에서 밀려난 어린이의 꿈과 희망 담아 / 민교협, 안기부장에 공개사과 요구
		2	해의한청년 국보법 철폐시위, 재미한청년 10주년 기념식 / 엠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 /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민교협 성명 전문)
10/12	262	1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 / 우조교 항소심 3 차공판, 조교입면권 싸고 공방
		2	성폭력위기관리센터 제3기 지킴이 공개모집 / 인터뷰 : 비정부단체(NGO) 한국위원회 실행위원 이 미경씨
10/13	263	1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 성폭력 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2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10/14	264	1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초 남북한 방문 /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 원폭피해자와 일본 전후청산등 / 성희롱 항소심 재판부, 공정재판 노력 약속.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 토론회
10/15	265	1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 철도노동자를 위한 하루찾집, 불교인권위 / 외대생 배병성씨 1심대로 무죄선고
		2	생명존중을 위한 불교인 모임, 사형폐지, 생명존중 운동 시작 / 14일 고난 운영위, 외국인노동자 주제로 10월 월례기도회 / 조정식열사 12일 추모비 개막 / 여성문제 요약한 여성수첩 95년 판 발행 / 전국여성대회 열려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256호-275호)

일일	호	면	기 사 제 목
10/18	266	1	긴급구속, 경찰·검찰·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기해야 한다"는 규칙은 어디로, 법원은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2	국제사회주의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 / 경찰발표 그대로 쓴 동아일보사 언론중재위 제소,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10/19	267	1	청소년단체 '생' 첫 공판,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 학교비리 다른 소식지 낸 고등 학생에 징계
		2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글, 두말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유초하 교수, 안기부에 자진출두
10/20	268	1	긴급구속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 민정련 회원, 기무부대에 연행
		2	'구국전위' 안재구씨 반국가단체구성등 공소사실 부인 /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 조선일보사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인권침해 우려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등 성명
10/21	269	1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철계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채 식사 / 동일여고, 무기정학 학생에게도 퇴학처분
		2	인터뷰 : 박세경 변호사-긴급구속을 해부한다
10/22	270	1	유가협 국회의원사당 앞 시위,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 /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 엠네스티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등 방문실태 조사
		2,3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서준식, 서울평화교육센터 평화교육강좌 중 발제)
10/25	271	1	정현백교수,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청구 /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2	에이즈감염자단체 '스톱에이즈운동본부' 발족 /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론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가
10/26	272	1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공안정국 탄압중식, 구속자석방등 촉구 / '현대판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 일본 안보리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운동 시작
		2	가평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 서명
		2,3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10/27	273	1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 김은주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씨 구각기밀 유조선고와 다른 판결 / 부친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박심한 부친 실랑이증 사망사건 양애리씨
		2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10/28	274	1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국가-자본가-브로커등에 3중착취 당해, 현대판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 살인혐의 김기용순경 사진,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 린법정
		2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10/29	275	1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등 핵심조항유보 함세웅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참여연대, 내무리 비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보장에 한 발 전진 / 외무부,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해' 기존입장 재확인
		2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간첩사건의 상당부분이 과 거 정권의 정치적 위기상황 에서 발표된 조작사건이라 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조 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 한 활동에 들어갈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 부, 조작간첩진상대책위)가 1일 발족했다. 천주교인권위 원회는 1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교관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조작간첩진상대책위 첫 사업으로 11월중 강희철씨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는 지난 해 8월부터 약20여건의 일본 관련 간첩 사건을 일본 가 톨릭청의 평화협의회와 공 동으로 조사활동을 벌여왔 다. 이 과정에서 이장형(61·광주교도소, 85년 구속, 무기), 강희철(37·대 전교도소, 86년 구속, 무 기), 손유형(66·전주교도 소, 81년 구속, 20년형), 신귀영(58·전주교도소, 80년 구속, 15년형)씨등 4 가지 사건에 대해 3차례

결건 일본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는데 그 결과 사건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간첩사건이 조 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건발생 당시 수사 절차상의 불법성을 제기했 다. 간첩으로 조작당해 수 십년동안 감옥에서 살아온 이들은 30여명으로 추정되 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영 장없는 상태에서 불법연행 되어 두세달씩 밀실에 감 금된 채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강희철씨의 경우 체포된 1백32일만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록되었 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은 가족은 물론 변호인조 차 면회할 수 없었고 은갖 유형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책위는 조작간첩사건 관련자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 진상규명활동을 위한 재심 청구, 특별법 제정등 법문 적 활동 △관련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구명운 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김형태(법률구조 소위원회 위원장)변호사는 "1년동안 조작간첩사건을 조사하면 서 이 문제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느낌을 받았 다"며 진상규명의 절박함 을 얘기했다. 또한 그는 "최근들어 대책위 활동이 알려지면서 교도소 내 변 호사의 접견권이 거부당하 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는 더더욱 수사절차나 사건내 용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 을 짙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장형·강희철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가톨릭 재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과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에서 공소장과 차 면회할 수 없었고 은갖 유형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국보법·노동악법 철폐」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서울구치소 양심수 1백2 명은 1일 일제히 국가보안 법·노동악법 철폐, 양심 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 전인 29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는데 단식농성에 들 어간 때를 같이해 오전 11 시 서울구치소 집견실 앞 에서는 1백5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단식농성을 시작한 1백2 명의 양심수는 "최근 문화 예술인, 교수, 심지어 고 등학생들까지도 광범위하 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부분별한 구속형포

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 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실 형률이 지난해 67.7%의 1/4도 못미치는 15.7%에 불과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 정도의 심 각성을 드러낸다"고 단식 농성이유를 밝혔다. 1시간 가량 계속된 집회에는 이 경순(민가협 상임대표)씨, 서치순(지하철노조 직무대 행)씨를 비롯해 생화학이 참석했다.

이창복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 의로 지난 8월 9일 긴급구 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 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 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 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 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 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 에 앞서 법정소란을 삼가 할 것을 강력히 언급하였 다.

잠시후 이창복씨가 입장 하자 방청객 50여명은 박 수와 환호성으로 그를 맞 아하였다. 곧이어 재판부 는 방청객의 행동을 지적 하며 11월 22일로 재판연 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 다.

이გი욱 변호사는 "4년간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왔지 만 방청객 소란으로 재판 이 연기되기는 처음"이라 며 아연실색해했고 "이는 피의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 라고 평가하며 재판부기피 신청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 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 다.

우리시대 인권의 불침번

<인권하루소식> 통신원이 되어주십시오

인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때 찾아옵니다. 1년여 동안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한 <인권하루소식>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줄 통신원을 찾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권을 지키는 불침번 <인권하루소식>의 주인으로 참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곧 인권하루소식으로 연락주십시오. ☎ 796-8364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본명: 백홍용)씨 양심선언 자료요약> 안기부의 조종 - 프락치 공작 - '간첩'의 탄생 -김삼석 남매 간첩 조작의 진상-

■ 배인오씨 약력 ■

1966년 서울 출생
 1982년-1985년 노동자 야 학으로 중고등학교 졸업
 1989년 박종철열사 기념사 업회 선전부에서 일함
 1989년 말 한겨레 영화제 작소 근무
 1991년 남누리영상 창단 대표
 1991년 16mm 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시나리오 및 연출
 1993년 노동자대학 수료

■ 양심선언까지의 경위 ■

(전략)
 또한 7월말(93년)에 만났 던 조종 조직원들을 다시 만나고 13일만에 귀국했습 니다. 귀국하여 일본에서 접촉한 사람들과 정인숙씨 가 일본에서 만났던 사람들 을 보고하였으며.....본 인이 안기부직원들과 합숙 하며 2일동안 보고문을 작 성한 곳은 마포구 불교방 송국을 바라보면 바로 오 른쪽에 있는 오피스텔 303 호 비밀안가입니다.

세번째 도일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장의 '국내 사민청 청년단체와 일본 조종단체가 연결할 수 있 게끔 나가 직접 가서 해봐 라'라는 지시를 받고 93년 1월경 도일하였습니다. (중 략) 14일후 귀국하여 안기 부 요원 3인에게 또 다시 이들동안 조사를 받았습 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과장 은 '사민청과 조청이 연결 만 된다면 너는 윗 분들 한테 큰 칭찬을 받을 것이 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럼 본인은 안기부로 부터 암호명과 고유번호를 지정받았는데 암호명은 '진 달래', 고유번호 '7353'이었

으며 고유번호를 호명할 경우 '53'이라 말했습니다. 이후 5월초(93년)에 안기 부 과장으로부터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총 련과 조총련과 연결이 되 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 신할 순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그걸 내가 해 야 된다. 내가 영화운동을 하니 어떻게 해서든 조총 련계 영화단체를 찾아가 북한영화를 입수하여 그 영화를 한총련에서 보급하 겠다'고 말하고 국내로 들어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래서 본인은 도일하여 조 총련계 영화사업가를 만나 북한영화를 입수하여 본인 이 2편을 가져오고 4편은 인편으로 부쳐달라고 말한 후 귀국했습니다. 역시 안 기부(비밀안가)에서 이를동 안 조사받으며 인편으로도 영화 4편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자 과장이 말 하기를 '김은주를 통해서 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 '영화가 도착하면 김삼 석한테도 북한영화를 소지 하게끔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조총련계 영화사(씨네 카론-서편제 수입업체)에서 일본사람을 통해 보내준 이북 영화를 김은주씨와 함께 가서 건네 받은 후 안기부의 지시대로 김삼석 씨한테도 이북영화를 주었 습니다.

"김은주와 연결시켜라"

이후 7월말경 또 다시 안 기부 과장이 지시를 했습 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면 조총련계 영화사업가 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북관련 영화 4편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자 과장이 말 하기를 '김은주를 통해서 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 '영화가 도착하면 김삼 석한테도 북한영화를 소지 하게끔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조총련계 영화사(씨네 카론-서편제 수입업체)에서 일본사람을 통해 보내준 이북 영화를 김은주씨와 함께 가서 건네 받은 후 안기부의 지시대로 조총련계 사업가에게 책을 보내달라 고 부탁한후 김은주의 이 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이 사람에게 책을 전달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10일 동안 일본에 있다가 귀국하여 일본에서의 공작 내용을 과장한테 잘 되었 다고 설명하자 그는 수고 했으며 '이번 일만 잘 성공 시키면 윗분들이 너에게 장가갈 밀천으로 집 한채 의 포상이 있을 것이다'라 고 말하였으며 김일식 10대 강령 등 몇 북한 관 련 책자를 본인에게 주며 김은주를 통해서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해주게끔 하 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가능한한 김은주와 한총련 한총련 문화부 사람을 만 나 '김정일 영화예술론'을

"하루 속히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얼마후 93년 7월, 안기부 의 과장으로부터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정일 영화예술론'을 한 총련 간부에게 전달하여 보급하게 하라는 지시내용 이었습니다. 그 지시대로 가능한한 김은주와 한총련 한총련 문화부 사람을 만 나 '김정일 영화예술론'을

건네주고 보고하자 과장은 '김은주가 며칠 후에 일본 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 네 가 김은주를 통해서 일본 에 심부름을 시켜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중략) 김은주씨가 이 영화사업 가에게 테이프를 전달해준 며칠 후 안기부 과장은 본 인에게 '지금 너와 내가 곤 란한 처지에 빠져있다. 하 루속히 사건을 하나 만들 어야 한다. 이번에 대상은 김은주와 김삼석이 가능하 다. 그러니 내가 잘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김은주와 연결시켜라"

이후 7월말경 또 다시 안 기부 과장이 지시를 했습 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면 조총련계 영화사업가 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북관련 영화 4편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자 과장이 말 하기를 '김은주를 통해서 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 '영화가 도착하면 김삼 석한테도 북한영화를 소지 하게끔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조총련계 영화사(씨네 카론-서편제 수입업체)에서 일본사람을 통해 보내준 이북 영화를 김은주씨와 함께 가서 건네 받은 후 안기부의 지시대로 조총련계 사업가에게 책을 보내달라 고 부탁한후 김은주의 이 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이 사람에게 책을 전달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10일 동안 일본에 있다가 귀국하여 일본에서의 공작 내용을 과장한테 잘 되었 다고 설명하자 그는 수고 했으며 '이번 일만 잘 성공 시키면 윗분들이 너에게 장가갈 밀천으로 집 한채 의 포상이 있을 것이다'라 고 말하였으며 김일식 10대 강령 등 몇 북한 관 련 책자를 본인에게 주며 김은주를 통해서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해주게끔 하 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가능한한 김은주와 한총련 한총련 문화부 사람을 만 나 '김정일 영화예술론'을

치밀한 공작의 성공(?)

과장으로부터 또 다른 지 시가 있었습니다. 지시내용 은 '이번(93년) 범민족대회 때(중략) 한총련과 함께 상 영하는 기회를 가져봐라, 가능하다면 한총련이 이북 영화를 상영하는 주제로 만들도록 하라'는 것이었습 니다.(중략) 그래서 안기부 의 지시대로 범민족대회 때 이북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9월 8일 안기부 과장이 아침에 본인을 불러내어서 김은주씨가 근무하는 강남 터미널 앞에 지하다방에서 만났습니다. 과장이 말하 기를 일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책을 갖고 오는데 조금 있으면 김은주가 나 갈 것이다. 김은주가 너한 테 뽀뽀를 치면 연락하지 도 말고 김은주 혼자 나가 고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 다. 오후 1시쯤 되자 안기 부 요원이 다방으로 들어 와 일이 잘 되었다고 과장 한테 말하자 저에게 남부 리사무실로 돌아가서 기다 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과장으로 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남산 안기부 밑에 크리스 탈 다방(안기부 요원들의 비밀다방, 안기부가 운영하 는 다방)에서 과장을 만났 습니다. 과장이 저에게 말 하기를 '김은주를 어제 현 장에서 체포했다. 그런데 김은주가 모두 나가 시켰 다고 자꾸만 말하니까 너 는 잠시 직원과 함께 피신 해 있어야' 그 이후로부터 과장말대로 안기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신해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총련과 김은주, 김삼석 남 매 간첩단 조작사건 내용 의 전부입니다.(후략)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한미행정협정 개정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

10월 28일 윤금이씨 2주기 추모제, 운동본부 1주년 행사 함께 진행

92년 주한 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씨를 기리는 "윤금이씨 2주기 추모제 및 제 2회 민족자주의 밤" 행사가 28일 기독교회관에서 있었다.

박순금(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씨는 추모사에서 윤금이씨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낮은 밑자리에서 소리지르고 죽어간 그녀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하게 했으며 과거와 현재에 있어왔던 미국과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하루에 평균 5건에 이르는 주한미군범죄를 없애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인사건 공대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상설화한다는 의미에서 93년 종교인, 평화운동가,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1주년을 맞이한 운동본부는 현재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10개 미

군범죄신고 센터를 두고 있으며 미군범죄에 대한 신고 상담 보상 예방운동, 기지실태 조사,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재학(대표간사)씨는 "주한미군은 다양한 형태로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1년 동안 운동본부는 미군범죄를 사회문제화 시키는 데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미군범죄에 대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에도 주한미군의 범죄가 줄어들지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그 예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재판권 행사가 0.1%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매달 첫째주 금요일 이태원에서 주한미군범죄를 알리는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김국혜씨 사건 고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며 기지내 조사활동에 근거하여 환경운동,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한 지역운동을 연결시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담은 자료집이 윤금이씨 추모 2주기를 맞아 발간되었다. 운동본부에서 펴낸 이번 책자는 윤금이씨 살해사건 경과, 사건일지, 93년 2월부터 시작된 공판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수록하였다. 또한 윤금이씨 공대위등의 자료와 공대위 활동평가 및 진로모색을 위한 제안서를 비롯하여 현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초기 사업안까지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추모시모음, 각종 유인물 모음, 신문기사 모음등이 실렸다. 발간사에서 전우섭씨는 "이 일은 민족의 위대한 힘을 모아 승리할 수 있었고, 이 힘을 키워서 다시는 이 땅에 윤금이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334쪽, 1만원)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2일 새벽6시 민중정치연합 포항지부 지부장 박창호(31)씨를 비롯해 회원 김숙향(26)·박은영(26)씨 등 7명이 사노맹사건관련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로 연행되었다. 박창호씨는 사무실에서 경찰청 본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데 당시 포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박씨에게 긴급구속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후5시30분 현재 박창호씨의 거처는 알려지지 않았고 김숙향씨 등 6명은 포항지방경찰청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자 명단: 이은아(포항지부 회원), 김용익, 여은희, 신윤정(이상 비회원)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원 기자회견-11월 4일(금) 오전 9시 기독교회관 6층 소회의실

<바로잡습니다>
*11월2일자(277호) 1면 서울구치소 단식농성 기사 중 민가협상임대표를 서경순으로, 지하철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석치순으로 정정합니다.
* 11월1일자(276호) 1면 배인오씨 양심선언 기사 가운데 '전국연합에 팩스 보내는 자료'가 아니라 KNCC 인권위에 발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국제인권소식

네팔, 국제선거감시단원 모집중

네팔의 국민선거감시위원회(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Committee, NEOC)는 11월 13일 있을 중간선거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선거감시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선거감시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정할 목적으로 네팔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Nepal)에 의해 정식으로 조직된 NEOC는 6개의 인권단체와 관련된데, 그리고 각계각층의 개인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지방 감시단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중이다.

NEOC는 32년만에 다당제에 기반을 두고 처음 열린 91년 총선에서도 모니터링 활동을 조직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네팔의 민주화 과정에 신뢰를 쌓도록 국제선거감시단원을 초청하기로 한 것이다.(문의: 796-8264)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이봉총리의 방한에 맞춰 현재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양심수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표현 및 결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문과 가혹행위, 광범위한 사형제도의 실시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지부는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수백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구금자들에게 대한

상시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또한 티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자와 종교인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94년 3월 이후 북경에서 구금되어 있는 반체제 인사인 퉁 리(Tong Yi), 웨이 징생(Wei Jingsheng), 장 린(Zhang Lin), 루우 향웬(Liu Huanwen) 그리고 리 하이(Li Hai)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93년 중국에서 2천백64명이 사형을 선고받아 1천4백19명이 사형집행된 사실이 유의하며, 세계에서 사형집행의 50%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고나심을 표명하였다.

팔로, 한국지부는 중국정부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양심수의 무조건적 인신 석방 △고문 및 가혹행위의 종식 △사형제도 폐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였으며,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북한 탈출자 및 탈출 불법노동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탈출자와 탈출한 불법노동자들에게 중국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피난처를 제공할 것과 강제송환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티모르 산타 크루즈 대학살 추모 집회 동티모르 자결 지지하는 세계인 참가예정

호주에서 인도네시아의 식민지인 동티모르의 독립과 자결을 지지하는 '동티

몰의 벗들(Friends of East Timor)과 호주에 망명한 동티모르인들이 결성한 '동티모르 공동체(East Timorese Community)'는 91년 11월 12일 동티모르 딜리시 산타 크루즈 묘지에서 일어난 대학살 3주년을 맞아 호주 Perth에서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집회는 여느 때와 달리 동티모르의 자결을 지지하는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첫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올 세인트 교회에서 미사를 보고, 포레스트 거리를 행진한 후, 그곳에서 강연과 동티모르 전통춤, 노래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동티모르는 4백여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그 후 76년 인도네시아의 무력 합병 이래 계속적인 인권침해로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약 20만 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91년 평화적 독립시위에 인도네시아군이 계획적으로 발포하여 470여명이 살상된 산타 크루즈 사건은 전세계에 알려져 커다란 충격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93년 11월 24일자 참조)

한편, 10월 10일 포르투갈의 한 라디오 방송은 동티모르 무장세력의 지도자인 코니스 산타나가 "현재 수감중인 프레티린(Fretilin,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혁명전선)의 지도자 자나다 구스마오의 석방 등의 요구를 인도네시아 측이 수용하고 고위급 정치회담이 이뤄진다면 무기를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 인도네시아군은 "동티모르 무장세력이 항복하지 않는 한 결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간행물◆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및 대책(토론회 자료집)

· 주요내용: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재오)/ 외국인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 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제5차 정책공청회자료집)-전국연합(☎747-4364/5)

· 주요내용: 김영삼정부의 주택정책과 우리의 대안(박기학)/ 김영삼정부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오용식)/ 김영삼정부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조홍준)/ 교통문제 해결할 통치권은 언제 발동될까(임삼진)/ 김영삼정부 환경정책의 문제점(김계남)/ 여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남인순) (총38쪽)

□장애인의 가정·평화(제2회 평화교육강좌 자료집)-ACRP서울평화교육센터(☎ 823-3713)

· 주요내용: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공급(서준식)/ 장애인, 가정, 평화교육(김성재) (총 18쪽)

□긴급토론회: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민교협등(☎888-3683)

· 주요내용: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박세경)/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김남석)/ 교수의 인권

□환경과 사회(94년 가을호, 제4호)-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703-7503)
· 주요내용:특집'환경·여성·복지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체계와 예산체계'(곽재기등)/정점-복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과제와 발전과정에 관한소고'(이인재)·지역-NGO(민간단체)와 미국의 환경정책결정과정등(총136쪽)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올2월 양심수들의 병역문제 해결 약속을 받고 1년간의 민주당사 농성을 정리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모임」(양군모) 회원들에게 10월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징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양군모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한 공문에도 "27세 이상 1년 이상 형 선고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국민역(징집면제)의 요건을 "2년이상 실형자(합산포함)와 1년이상 선고자 중 2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 4년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89년 3월25일부터 93년 2월24일 기간중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제

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자신들의 행정처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미 시행령이 확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근대(28·23개월 복역, 고려대 중문과 대학원1학기)씨를 포함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병무청의 난대없는 연락을 받고 사회생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얼마전 학원을 차렸거나 11월에 결혼식을 잡아둔 사람등 양군모 회원들은 과거 또는 현재 대학원에 등록한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입대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군모는 "이번 병무청의 처사는 청원처리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월권적인 처사"라고 항의했다. 또한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학원에 입학한 경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기피경력

이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군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4일 병무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

민가협 57차 목요집회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약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는 위대한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 제57차 목요집회가 3일 오후 2시 답골공원에서 열렸다. 민가협은 국보법 철폐투쟁에 힘을 집중키로 하였다.

유가협,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 청와대 방문도

'의문사 전면 재조사와 국회내 의문사전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을 하루 앞둔 3일 「전국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원13명은 국회의사당 앞 시위와 민자당 정책1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밖에도 민자·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유가협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계속 항의방문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벌어졌는데 경찰측은 집시법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막았다. 유가협은 4일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의 행사

- 미헌병대의 한국인 세 모녀 불법감금, 폭행치사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과 가두홍보
 1.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오후3시
장소: 용산 미8군 사령부(남영역에서 삼각지방면으로 행진예정)
 2. 가두홍보/오후4시30분-5시30분
장소: 이태원 상가일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집결)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오전 9시
장소: 기독교회관 6층 소회의실
- 인도유출가스누출참사-보팔참사 10주년 기념 집회
시간: 오후6시30분 장소: 종로성당
주관: 보팔참사 10주년 기념 한국행사위원회
연락처: 노동정책연구소(749-6052)
환경운동연합(735-7000)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안동교도소 최대호 이경 사망사건

유족들 강력히 타살 의혹 제기

-정수리에 피멍, 정갱이에 구타 흔적 등 문제-

지난 10월 31일 오전 0시 10분경 안동교도소 경비교도대 6내무반 소속 최대호 이교가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최초의 목격자인 박재우 이교에 의하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최이교가 화장실 안에서 목매신음중인 것을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안동성소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0시 50분경)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안동교도소측에 의하면 최이교는 포승줄을 80cm 가량 끊어서 화장실 경첩에 매어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내일 신문문의 취재진이 취재를 하려 하였으나 교도소측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한편, 10월 31일 오전 2시경 교도소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망자의 부모와 친척들은 최이교의 사망에 대해 자살일 리 없다며 강력히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하고 제기

우선, 부모가 사망 8일 전인 10월 23일 면회하였을 때 최이교는 부모 앞에서 잘 웃지 않으며 '항후 2달간은 신병이기 때문에 웃지말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던 점, 사체의 정수리에 0.7cm 가량의 피멍자국이 있는 점, 정갱이 부분에 피멍이 있고, 딱지가 붙어있던 점, 최초 교도소측이 서울 모에게 전화로 사망사실을 말하면서 군화끈으로 목을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씨의 국가손배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씨의 모친이 김영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문국진씨의 부친)가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변호사는 이 진정서에 대해서 원고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제출한 것임을 증인을 통해 확인시켰다. 그러나, 김영옥씨는 나이가 많고 기억력이 매우 감퇴해서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재판 12월8일 10시)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1. '의문사'는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신성한 인권마저 마구 짓밟고 그를 통해 승진을 거둔 자들이 그대로 행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특히 인권유린의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에 고문이나 그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어간 역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의문사'는 분명 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없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안기부, 기무사(전 보안사), 경찰, 검찰은 군사정권의 안보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을 구순하고 고문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그 사인조차 은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사인해 고통 당해온 유가족들과 그 동료들은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 정권 하에서는 반드시 의문사는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93년 5월부터 '의문사 전면재조사 국회 청원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런 결과로 10만명이 넘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 캐나다 동포들의 서명과 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 대표들의 서명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사건 종결 처리된 '의문사' 사건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합니다. '의문사'사건은 아무리 사소한 사건도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억압적인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사건들로서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동료를 잃었던 것입니다. (2) '의문사'의 책임자를 색출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국회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6공 초기에는 5공 청산을 위해서 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의문사는 5공청산특별위원회 내의 인권소위에서 다루어졌고, 청문회도 열리도록 되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 6공 하에서도 의문사는 근절되지 않았고, 다시금 그 수를 더해만 갔습니다. 국회내에 의문사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이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의문사가 철저히 조사되고 다시는 이땅에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지난 3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초경찰서 소속 형사 채학식·박찬식·최병일씨를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다. 채학식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발생한 미군병사 김로저 살로이스 병장의 긴급국해(53)씨 강간치상 담당 수사이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강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미군범죄를 처리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가 팬티와 팬티스타킹이 벗겨진 채로 발견된 점과 자정이 넘어 영업을 끝난 시간에 혼자 있는 피의자를 찾아온 점 등 성폭행 혐의가 뚜렷한데도 단순히 폭행죄만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항의했다.

특히 로저병장이 낸 항소심에서 채학식형사를 증인 심문하는 과정에서 사건초기 인지보고서를 통해 '성폭행의 혐의가 짙어 피해자의 질분비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뢰했다'고 보고했으나 의뢰사실을 반복하는가 하면 영동세브란스 병원의사에게 부탁했는데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감정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보고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없는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질분비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데,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감정뢰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증거를 인멸시켰고, 수사인지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질분비물을 채취, 감정뢰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김국해씨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담당검사들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에서 강간치상으로 송치된 사건을 윤정석 담당검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묵살한 채 조검사가 어떠한 보장수사도 하지 않자, 하광호(서울형사지법 6단독)판사가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검사는 '결심구형대로 7년을 구형해 재판부가 "이 사건은 법률에 의해 징역 15년까지 볼 수 있다"며 검사의 구형을 제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에 당황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것이 인정된 사실"을 이유로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경 로저병장의 항소로 재판이 열렸는데 성폭행여부를 밝히기 위해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의 증인 채택으로 채학식형사가 나왔다.

(2면에 계속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국회청원서 제출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박정기)는 4일 오전 11시 소개의원이부영 의원의 91명의 의원서명과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 국제인권단체, 재계나 다 동포들의 서명을 취합하여 국회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출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회의(위원장: 강희재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가 11월 4일 속리산 서당골 농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발족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11월4일자(279호) 행사안내 중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행사 가운데 "폭행치사"를 "폭행치상"으로 바로잡습니다.

○ 오늘의 행사 ○

- △제65주년 학생의날 기념행사/나의참똥과 나의의지로 함께 열거갈 열린 학교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 서울연합회
오후 3시 홍사단 3층 대강당/1부 기념식/2부 문화행사/3부 땀땀마당/☎743-5062
- △부패무능정권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대회/전국연합, 국민회의, 민정연, 전노대 등
오후2시 탑골공원/☎747-4364,5
- △경실련 검찰권 운동, 이대로는 안된다/경실련
오전10시 경실련 강당/☎766-5393,741-7963

<알립니다>

- △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 이사했습니다.
전화:365-4016 팩스:365-4017
주소: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층)
- △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에 새 팩스가 생겼습니다.
팩스:793-4745

단체탐방 33 / 서울지역공부방연합

하늘아래 가장 가까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매일 2시가 되면 가방을 들고 공부방으로 향한다. 연탄수레가 겨우 다닐만한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높고 도 낮은 층계를 내려간 후 공부방에 이르면 다닥다닥 맞붙은 집 사이로 공부방이 보인다. 있는 집 아이들이 학원 봉고차를 타고 두세개 정도 학원 가방을 들면서 피아노, 과외, 무용학원으로 향하는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기적이(밤골아이네 공부방)는 오늘도 일 나가신 엄마, 아빠 대신 동생에게 점심을 먹고 곧장 공부방으로 갔다. 반겨줄 선생님과 친구들이 기다린다는 기대감으로.....

이름하여 '산동네,달동네'라고 불리우는 도시빈민지역은 가난하지만 정겹고 따뜻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서울 도시빈민 지역에는 30여개 공부방이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 부모가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모여 공부도 하고 제도교육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는 인성교육도 하면서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간다. 보통 10-20명 공간에 8명에서 30명까지의 어린이들이 있고 1명의 실무자와 6-17명의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살림은 대개 후원금으로 운영하지만 넉넉하지는 못하다.

공부방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진인교육의 실시'다. 현재 제도교육은 학생을 능력과 경쟁력을 가진 인간으로 양성한다. 또한 중산층의 가치가 사회화되는 과정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교육내용에서 소외감을 낳게 한다. 배은경(간사)씨는 공부방의 교육목표를 "인간이라

면 누구나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 모여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부방에 서는 학습향상을 위한 교

우리가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자기 사랑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곳

육도 진행하지만 무엇보다 인성 교육과 공동체 교육에 비중을 둔다. 가정과 학교에서 사람들이 못배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배씨는 "무언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동등 부은 얼굴로 공부방에 처음 왔던 민영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밝은 얼굴로 변화되었다.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 모양이다"고 말한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 생활에서 나눔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험한다.

초기 공부방은 지역운동에 뜻을 두거나 민중교회와 같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소그룹 단위의 활동가들이 모여 봉천동, 행당동, 미아동, 신림동 등 지역에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작은 결실들이 모이고 서로의 뜻을 하나로 합쳐보자는 의미로 1988년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장 이미경)이 만들어졌다. 봉천동, 성수동, 상계동, 삼양동 등 지역 공부방이 모여 연합조직이 만들어졌고 중앙 사무국 산하에 교육분과, 학생분과, 어머니학교분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무국은 각 공부방을 위한 교육사업에들어들어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교육을 담당

하고 지난 10월 8일 있었던 "민들레의 합창"과 같은 전체적인 기획사업을 준비한다.

공부방 운동은 교육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운동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정치참여, 마을 문화제 개최 등은 공부방이 지역내 지역운동의 한 센터로서 자기위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구성된 자부회와 자모회 모임은 지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알리는 작은 씨앗이다. 현재 금호동, 행당동, 봉천동에 위치한 희망의 집, 푸른 하늘, 행당배움터, 친구네 공부방은 철거에 임박해 있다. 이들 지역의

철거투쟁은 공부방 자모회 어머니들이 중심되어 움직이고 있다. 실무자들은 철거바람이 몰고오는 지역공동체의 해체 현상을 걱정하며 이들이 상처입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토요일 오후는 마을 뒷산에서 체육시간이 있는 날이다. 동네는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뒷산만큼은 아이들 차지이다. 동사무소에서 지어준 놀이터는 녹이 슬고 그네줄은 빠져 빠터덕거리기 일쑤이다.

그러나 흙과 나무, 돌, 맑은 공기의 자연은 아이들의 진정한 녹지 않은 놀이터이다. 신나게 선생님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배씨는 "세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을 평등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바램을 밝혔다.

전화: 712-8308
<하루소식 기자:최은아>

(1면에서 계속)

이 재판에서 가해자의 질분비물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검사의 요청으로 나온 피해자 김씨가 성폭행사실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없이 항소를 기각했다. 10월 26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심 징역10년을 파기하고, 폭행죄만 받아들여 최고형인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는 2차례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강간에 대해 증언하는 등 고통을 당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뇌를 크게 다쳐 후유증으로 1년이 지난 지금, 후각장애, 정신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의 한국 재판권 행사비율과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말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공청회에서 배급자번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 재판권 행사비율은 91년 발생한 1천3백57명의 범죄인중 18명, 92년(1-8월) 발생한 6백55명의 범죄인 중 6명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 행사비율은 1%를 기록했다. 또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징역형이 90년엔 3백33건중 30건, 91년에는 7백33건중 8건, 92년(1-8월)에는 3천3백35건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잊지 말자 보팔 참사! 인도 보팔 가스누출참사 10주년 기념행사 진행돼 원진레이온비대위는 약속 이행 촉구

12월 3일은 유독가스 누출로 5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인도 보팔 참사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시아 지역 산재·환경재해 피해자 연대'는 오는 12월 3-4일 아시아지역 공동연대로 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팔 참사 10주년 기념 한국행사위원회'가 12월 3일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는 등 산재·환경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팔참사 피해자들은 11월3일부터 20일까지 동북·동남 아시아를 순방하며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팔피해자인 라지아 베(Razia Be, 38·보팔가스피폭여성기구소속)씨와동역으로 사타나드 사랑기(Satinath Sarangi, 보팔정보와 행동그룹 소속)씨가 3-7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고엽제·원진레이온 피해자와 온산동

환경피해지역등을 방문했다. 기자회견과 기념집회 가져 4일 보팔 방문자들은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 및 보팔참사 10주년 기념집회를 갖고 보팔사태 소개, 인천진흥정밀·고엽제·원진레이온 등 한국피해사례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랑기씨는 '보팔참사의 실태와 전망'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10년전 유니온카바이드 사의 농약살충제 공장장에서 유독가스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의 누출사고는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 비용삭감조치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팔사태서 농약공장의 폭발로 인한 가스누출로 순식간 8천여명이 숨졌으며 지금도 매달 15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등 그 후유증은 심각한데

10년간 발생한 사망자는 1천6백명, 50만명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인도정부보고 5천5백명 사망, 피해자 10만명 이상).

전세계 노동자 연대 필요 다국적기업의 공해수출과 안전관리 소홀이 보팔 참사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그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중의 생명을 바꾸지 못

하도록 할 것을 아시아와 전세계 노동자, 희생자들이 연대할 것을 촉구했다. 라지아 베씨도 가해자들을 인도 땅에서 심판받도록 싸움을 해야하며 다국적 기업을 무방비상태로 두는 것은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원진레이온 공장부지가 울 연말에 매각되면 공장부지에 1만5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이에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는 지난해 11월9일 폐업을 결정하면서 정부와 민자당이 합의한 △산재종합병원설립 △도시철도공사 인력 채용시 우선 채용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공 판 안 내 ◆

- 11월 8일 (화) 김재용,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이종욱, 국보법, 3시, 318호, 합의25부
- 11월 9일 (수) 안재구, 정화려(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시, 311호 양윤모, 노동쟁의위반법, 10시30분, 321호, 6단독 이영숙, 국보법, 2시, 321호, 6단독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0시, 418호, 합의1부 김명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10시, 421호, 8단독 김명욱, 국보법, 10시, 421호, 8단독

● 오늘의 행사 ●

- 민주노총 무엇을 해야 하나(토론회)/오후2시-6시/여의도여성백인회관(780-5688) 주최:민주노총건설추진위(771-8250/)
- 토론회,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오전 10시-12시30분/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주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 모임
- 「12·12 사건 토론회」/오후 3시-6시 주제:반란이나, 내란이나/피의자들의 공과 과/국민의 범감정/기소유에 타당한가?/검찰권행사의 제문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주최: 대한변호사회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합본 2호』 판매중

*101호(94년 2월 5일)부터 200호(94년 7월 7일)까지
*신공안정국에서의 인권탄압상을 한눈에
*총 316쪽의 합본2호에는 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주제별, 사건별 색인을 달았습니다.

가격: 1만원(합본1호 동시 구입시 1만5천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싸 한총련 조동위원장 연행

지난 5일 오후 1시50분경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양동훈(23, 조선대 총학생회장, 남총련의장)씨가 조선대 구내에까지 각목과 쇠파이프, 가스총으로 무장한 경찰 30여명에게 연행되었다.

이날 양씨는 조선대노동조합의 체육대회에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한 후 2명의 학생과 민주로를 거쳐 총학생회실이 있는 본관으로 올라가던 중 앞을 가로막는 봉고차 2대와 승요차 1대에 분승한 30여명의 전남도경 소속 보안수사대원들에게 연행되었다.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양씨가 총학생회실이 있는 본관으로 올라가던 중 봉고차 한대가 앞을 가로막았고, 양씨 등이 뒤로 돌아 도망치려 하자 다시 다른 봉고차 한대가 뒤에서 길을 막았고, 이어 승용차 한대도 이에 가세했다고 한다. 경찰들은 순식간에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다른 두명의 학생들은 뒤를 쫓지 않고 양씨만을 쫓아 검거하였다고 한다. 당시 경찰들은 각목과 쇠파이프, 가스총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봉고차의 앞을 막고 연행을 저지하려 하자 경찰 한명이 봉고차 안에서 장박으로 권총을 하늘을 향해 쏘아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조선대는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이나 경찰의 침탈을 당했고, 지난 10월 11일에는 전남도경 소속 이화석 경위의 학원사찰이 발각된 일도 있다. 10월의 사거병 대해 전남도경 안병욱정장은 학원사찰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으나, 이번

의 사건으로 전혀 학원사찰이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양동훈씨는 6.18 기차정지사건 등으로 죄익사범 최고인 1,000만원, 2계급 특진의 수배를 받아왔다.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검찰권 운용, 이대 방안'의 발표에서 "12·12 고소, 고발사건과 부친 성고문의 피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써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석연변호사는 '검찰불신의 원인과 검찰권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 고소, 고발사건과 부친 성고문의 피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써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단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불신의 원인으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기소·불기소여부에 대한 배타적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적 의혹사건이나 직권남용, 대항독직 사건등 수사권을 편의적, 편파적으로 이용하고 수사결과 기소여부를 선별적, 차별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불구속의 기준에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부패무능정권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대회가 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정치연합, 민가협, 구국전위사건관련자모임등 시민, 학생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시민대회에 참석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민중생존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12.12는 기소유예하고 철도 파업에 단순 참석한 조합원에게는 4년 실형을 구형"하는 등 반민중적 억압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수대교 참사,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으로 민심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생안전은 외면한 채 구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지배세력 안정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경순(민가협 상임의장)씨가 신공안정국하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를 발표하였고, 서준식(전국연합 인권위원장)씨가 '동두천 시민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동두천 시민회 의장 박태규씨와 강홍구(사무국장)씨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동두천시민회 등은 5일부터 미2사단 항의서한 전달, 거리선전, 서명운동, 단식농성, 시청 항의방문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미 2사단 정문 앞에서 거리 단식농성, 오후5시부터 8시까지 동두천 시내 곳곳에서 거리 단식농성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사단, 학생의 날 기념식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는 제 65주년 학생의 날 기념하는 행사를 5일 홍사단 강당에서 1백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나의 참뜻과 나의 의지로 함께 열어갈 열린학교'란 주제로 광주학생운동 기념비문을 낭독, 마당국이 공연, 학생들의 자치활동 사례가 발표되었다.

동두천 시민회 미군 상대로 단식농성, 거리서명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20분 동두천에서 미군지프(운전자 미2사단 102정보대대본부중대 소속 윌턴 윌리엄 상병)가 오토바이로 타고 가던 농민 정현기(67세)씨를 치어 한때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정현기씨는 의정부 중앙병원에서 혼수상태로 두달여 입원 치료하였으며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현기씨 가족은 1천5백만원에 이르는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군측은 '한미행정협정'상 공무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보상비는 보상판결전까지 지급할 수 없다며 보상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동두천시민회와 보산동상가번영회 등은 이 사건을 접하고 정씨의 조속한 치료비 우선지급을 위한 '동두천 시민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동두천 시민회 의장 박태규씨와 강홍구(사무국장)씨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동두천시민회 등은 5일부터 미2사단 항의서한 전달, 거리선전, 서명운동, 단식농성, 시청 항의방문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미 2사단 정문 앞에서 거리 단식농성, 오후5시부터 8시까지 동두천 시내 곳곳에서 거리 단식농성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윤석양 이병이 7일 광주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진심으로 윤이병의 출소를 환영합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한국인 세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동두천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무기한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인권하루소식 11월 8일자, 281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목사등, 이하 운동본부)는 8일 주한미군사령관 앞으로 한국인 세모녀를 폭행한 미헌병을 처벌할 것과 유사사건의 재발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우송하였다. 운동본부는 지난 4일 이 서한을 미군사령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군 당국이 취재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서한 접수를 거절, 6일 운동본부 측에서 미군사령부 공보처장 김 콜스3세를 만났으나, 규정상 서한 전달이 불가하다며, 접수를 다시 거절하여 이날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었다고 운동본부측은 밝혔다.

세모녀를 연행, 폭행, 모독한 미헌병대 이 항의서한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미군과 국제 결혼한 딸 설은하(40, 한남동의인주택 거주)씨를 방문한 설씨의 노모 김금순(68)씨가 딸이 준 찹쌀과 쇠고기를 빌미로 미군 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란 누명을 쓰고 오후 9시 40분경 미헌병대에 강제연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두딸마저 감금, 조사당하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딸 설은하, 설은주(30)씨가 미헌병대의 연행 조치에 항의하자 미헌병들은 폭행을 하며 수갑을 채우고 이틀마지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금순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나친 쇼크로 기절하여 옷에 오줌을 싸기도 하였고, 미헌병들은 노모를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설은하씨의 요구를

거절한 채 오히려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무혐의 드러나자 이번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몰아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자 설은주씨를 연행 2시간만에 한국경찰에 인도했고, 설씨는 5시간 동안 구금,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미군 헌병대에서는 설은하씨와 설은주씨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를 뒤집어 씌었다.

이 사건으로 설은하, 설은주씨는 각각 전치 2주와

10일의 상해를 입었으며, 김금순씨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병원에 몸져 누워 있다.

이 항의서한에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미헌병대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미군 영내에 연행되는 한국 민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5일에도 이태원에 서 미군병사가 한국인 한명을 폭행하여 심한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 공 판 안 내 ◆

- 11월 10일 (목)
 - 김종백, 국보법, 4시, 311호, 합의21부
 - 문영기,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 김병득, 국보법, 4시, 317호, 3단독
 - 배형록, 국보법, 10시, 318호, 합의10부
 - 김순정,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 안희만, 국보법, 4시, 318호, 합의25부
 - 황인성, 국보법, 10시, 424호, 10단독, 전국연합
- 11월 11일 (금)
 - 홍중희, 국보법, 2시, 311호, 합의23부, 구국전위
 - 류낙진, 국보법, 3시, 311호, 합의23부, 구국전위
 - 김현정, 국보법, 10시, 317호, 1단독
 - 고영국, 국보법, 11시, 424호, 10단독, 샘사건
 - 이병석, 국보법, 11시, 424호, 10단독

● 오늘의 행사 ●

- 토론회,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오전 10시-12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주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 모임

기자회견

안기부 프락치

간첩공작수사 진상발표

-안기부 프락치 백홍용(가명: 배인오)씨 양심선언 베를린 현지조사 결과 발표, 김삼석 남매 간첩사건 조작 물증 제시-

오늘 오전 10시/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제 확대 촉구 대한변협, 12.12. 사건 토론회에서 지적

지난 10월 29일, 검찰이 발표한 12.12 사건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과연 기소유예만이 타당한가!

12.12사건 공소시효 약한달을 남겨놓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2.12 사건 토론회’를 8일 오후 3시 100여명의 시민, 법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졌다.

고발인측으로 나온 김기진(전 육군헌병감)씨는 “12.12사건은 국가와 군에 대한 하극상 반란이며 검찰이 12.12 사건을 기소유예한것은 반란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검찰이 12.12 사건을 기소유예 한것은 법적용의 형평성과 사법부 독립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한변협은 검찰의 12.12 사건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최고 법집행이 사형까지 규정한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기소유예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이나 관행, 국민의 법적 정의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광주민중항쟁과 임진강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등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공소시효 폐지,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제 확대, 사법부에 대한 감시 고발등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논의되었다.

검찰은 12.12사건을 기소유예하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전직 대통령의 공적을 고려하였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배중대씨는 “언제나 정권 담당자들은 국민의 뜻을 앞세워 오색한 정치적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석씨는 “12.12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12년간이나 후퇴하였고 광주시민학살, 삼청교육대, 언론통폐합등의 인권침해로 보아 공적보다는 실이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평가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영도(대한변협 인권위원장)씨가 사회를 보고 고발인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 후 12.12사건과 관련하여 ‘반란이나, 내란이나’, ‘피의자들의 공과 과’, ‘국민의 법감정’, ‘기소유예 타당한가’, ‘검찰권행사의 체문제’등 5가지 소주제를 배중대(고려대 법과 교수), 우승룡(문화일보 논설위원), 서경석(경실련 사무총장), 고영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씨가 나와 토론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검찰의 12.12 사건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최고 법집행이 사형까지 규정한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기소유예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이나 관행, 국민의 법적 정의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광주민중항쟁과 임진강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등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 한국어성민우회 발간

동일여고 졸업생 피켓시위

「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 일까요?», 「왜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일까요?», 「직장내 성희롱의 다양한 유형들-눈빛에서 몸짓까지」,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당신에게 성희롱이 일어났다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몇가지 의문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를 한국어성민우회에서 발간하였다.

16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각 직장의 노조, 여직원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800원에 판매한다. 문의는 한국어성민우회(266-5763)5로 하면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가져

민주노조 진영의 ‘민주노총건설추진위’가 8일 오후2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정책토론회-민주노총 무엇을 하나’를 열고 민주노총 건설의 의의와 추진경과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금수(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씨는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조직 노동자의 광범한 존재와 조직역량의 감소, 기업단위 노조형태, 지도역량의 취약성을 조직상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민주노총건설위 정책담당집행위원은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로 스노동조합조직력의 확대강화스노동기본권의 확립과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스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를 제작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당한 동일여고 송경진(19, 3년, 퇴학), 김순주(18, 2년, 퇴학), 김윤희(18, 2년, 유퇴학), 김윤희(18, 2년, 유퇴학)등을 구명하기 위해 동일여고 졸업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진숙씨를 포함한 6명의 졸업생들은 7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동일여고 정문에서 하교길 학생들에게 부당징계당한 학생들의 정당성을 알리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편, 동일여고 측에서는 징계당한 학생들이 각서를 쓸 경우 징계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각서 내용과 관련하여 징계당한 학생들은 각서쓰기를 거부하고 있다.

영 참가 확대 사사회보장 제도 확충과 교육, 의료개혁 등 국민생활 향상 스노동제민주화 스노국의 자주화, 민주화, 평화통일의 실현 스노동민중세력과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와협력 강화를 들었다.

토론자로 나온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위원장)씨는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으로서 ‘참여적 노사관계’를 제시하고, 참여적 노사관계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최규업(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민주노총의 건설은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담보해 낼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의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노동조합에서 복지, 세계, 환경, 교통, 통일 문제 등 국민적 이해를 위한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배인오씨 양심선언 현지조사 결과 발표-

지난 10월 31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안기부 프락치 활동을 공개한 백홍용(가명: 배인오, 전 남누리영상 대표, 하루소식 11월1일자 참조)를 11월 2일부터 7일까지 4박5일동안 민변 소속의 이덕우, 이기욱 변호사가 베를린 현지에서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고영구 변호사)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안기부 간첩 공작 수사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 배포된 자료집에는 백홍용씨가 직접 작성한 두 통의 진술서 사본과 안기부 수사관의 얼굴과 말소리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의 녹취록, 백홍용씨 여러 사본, 독일방문 조사보고서, 성명서 등이 실렸다. 또, 기자회견에서는 백홍용씨가 안기부 직원 몰래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상영되었다. 두 변호사는 4박5일간의

조사결과 백홍용씨의 양심선언이 진실임을 믿게 되었고, 비디오 테이프 등이 물적 증거라고 말하였다. 고영구 민변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 사건은 안기부 프락치 공작이 처음 공개된 사건이고, 프락치 공작에 대한 물적 증거까지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안기부가 이미 진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획하여 프락치를 투입하고 간첩을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김은주씨는 비디오 테이프에 나온 인물이 자신을 직접 수사한 인물이라며 백홍용씨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언하였다. 김은주씨는 "김과장이라는 사람이 당시 3일 동안 안기부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는 힘닿곳은 얼굴과 특유의 억양이 뚜렷이 기억난다. 이 사람은 내 뺨을 때리고 구타를 하고, 심지어는 옷을 벗겨야지 안되겠네 하는 등의 말을 거침

없이 했다. 또, 한 사람(윤봉환)은 검찰에 송치될 때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백홍용씨에게 지시를 내린 안기부 직원은 과장이 김성훈, 다른 직원은 윤동한(또는 윤봉환)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백홍용씨는 자신이 울조에 이기욱 변호사 사무실 등에 나타나 프락치가 아니라 해명하고 다닌 것도 모두 안기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운동권 중 7-8명의 프락치 포섭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 두 명 정도는 확실하게 협조할 의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 백홍용씨가 안기부 직원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93년 10월 30일 백씨의 선배 약혼식을 찍어 주다가 안기부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것과 약혼식을 마치고 차안에서 찍은 것이고, 두번째 테이프는 대부분 말소리만 녹음이 되었는데 이는 안기부 직원을 의식해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렌즈의 캡을 씌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백씨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로 파주의 광탄 뉴시터에 안기부 과장의 지시로 피신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초보적인 공작 교육을 받았으며, 김현희도 만났다고 한다. 이 뉴시터에 피신해 있을 때 92년 5월 안기부 부산 안가동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내장(89년 중앙대 총학생회장, 의문사-편집자 주)이 우리에게 협조를 안해서 죽었다"는 말이 생 각나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두 변호사가 입국할 때 공항 대합실에서 세관에 들어가 짐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자동차로 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한편, 민변 등은 백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김삼석 남매의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이를 위해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의 사과 △사건 관련자와 안기부자의 파면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의한 유사사건의 의혹 규명 △사건 재발을 방지할 대책 강구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는 이것은 범청학련과 한총련 등이 조작한 것이라고 민변에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며, 국회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회 정보위에서 안기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사건 자료를 다음호부터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능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국제인권소식

국제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최근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마 인접국에서 온 난민들이 태국 당국으로부터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본국 송환을 강요당하고 있는 등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태국에는 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절차도 없고, 태국정부가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명한다. 이들은 불법체류하는 여행자들이나 허가없이 일하는 이주민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습격당한 후 태국으로 망명한 버마의 '몬'이라는 소수민족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태국군대가 허위보고를 함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태국군대는 난민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물자 공급을 봉쇄하고, 수송소에 비축해둔 식량을 탈취했다. 또한, 난민들은 태국정부의 계속된 단속으로 방콕과 그의 다른 도시에서 연행되어 종종 구금센터에 오랜 기간 동안 감금되어 있다.

"방콕 이주민 구금센터"의 실태는 국제적인 최저생계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고, 난민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에 대한 태국정부의 정책은 국제적 수준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라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하며 "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태국정부가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아시아 여성 법정, -개발과정에서 침해받는 여성인권 현실 다뤄-

아태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침해받는 여성의 인권에 관한 '아시아 여성 법정(Asia Women's Tribunal)'이 12월 1-2일 방콕에서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주제로 열린다. 아태지역은 신흥공업국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나, 이윤추구지향적인 개발과정에서 여성 대다수는 제3세계의 빈곤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성차별과 폭력의 대상으로서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삶을 침해하는 제도적인 절차를 개발의 덩어리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된 목적중의 하나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여성의 권리 △난민여성 △이농현상 △산업화와 여성의 권리 △여성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등의 주제를 다룰 것이다. 또한 현재 여성 인권의 개념과 실재를 검토하고 비판하며, 여성의 권리를 인권의 맥락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는 내년에 개최되는 '사회개발정상회담'(3월, 코펜하겐)과 '세계여성대회'(9월, 북경)의 주요 쟁점사항들을 포괄하고 있다.

성희롱, 권력의 의한 것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일수록 성희롱 심해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토론회

성희롱은 성에 관한 문화적 이해의 차이 보다는 권력에 관한 것이며 여성을 여성의 자리에 잡아두기 위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섭수모임'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성희롱, 왜 권력의 문제인가'란 주제로 발표를 한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교수)씨는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인도 어민 무기한 파업 돌입, 외국 어선 조업 금지 요구

인도의 '외국 합작투자업

체'에 반대하는 국민어업행동위원회(National Fisheries Action Committee against Joint Venture)'는 11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도정부가 외국 어선들에게 어장을 개방하여 어획량 100%를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어류 부족, 막대한 부채가 있는 인도 원양어선 존재, 어장의 고갈등 750만명 이상의 인도 어민들의 생계와 나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업기간중 어류 판매 및 소비등 어업활동 일체를 거부하며, △외국 어선 금지 △원양어업 법규 개정 △어류 수출 통제 △지방 소비를 위한 어류 확보 △전문적인 원양어업종사자 확보등을 요구할 것이다.

성희롱, 권력의 의한 것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일수록 성희롱 심해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토론회

성희롱은 성에 관한 문화적 이해의 차이 보다는 권력에 관한 것이며 여성을 여성의 자리에 잡아두기 위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섭수모임'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성희롱, 왜 권력의 문제인가'란 주제로 발표를 한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교수)씨는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방식으로 여성이 새로 진출했거나 여성이 소수인 직업과 작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1989년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100명에 대한 Nancy Baker의 연구(Goleman, Daniel "Sexual Harassment:It's About Power, not Lust", New York Times, Oct. 22, 1991)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여성이 보유하던 직업이 아닌 기계기능공인 여성들과 여성수가 많은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많이 희롱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여성에게 비전통일수록 성희롱을 그 만큼 더 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뒤받침하는 사회적 세대매저리즘 이론은 모든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은 권력과 무권력의 관계,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관료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무권력의 사이에서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매조키스트가 되고 자신보다 하위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디스트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사무적 여성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한 사람은 직속상사가 38.9%, 동료남자직원이 37.7%, 타부서 상사가 13.7%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사무적 여성들의 경우 남자 동료라 하더라도 남자직원의 말단 하위직중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과의 근무상 지휘, 감독관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층상위계 구조속에서 성희롱이 일어난다는 것은 권력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백홍용씨 양심선언을 보는 각계의 의견

지난 9일 있었던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진상발표 기자회견은 현 정부에서도 안기부가 프락치 공작을 통한 간첩조작활동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에 대해 직접 변호사들이 독일까지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발표한 것이란 점에서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회대의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 4-50명이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한겨레신문과 기독교방송만 이 사건을 보도했다. 두 신문사 하이텔과 천리안 통신에는 기사를 올렸으나, 막상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7일보의 사회부 한 기사는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임을 알면서도 쓰지 못한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H일보의 한 기사는 "그런 게 무슨 상관이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간지의 기자가 이 사건을 쓰면서 세군데에서나 압력을 받았다며 기사가 실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홍용(가명: 배인오)씨가 기자회견을 한 독일에서는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다. 타게스짜이퉁(die tageszeitung)을 비롯한 신문에는 "제야의 비밀을 탐지한다"란 제목 하에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다른 신문도 이와 비슷하다. 또,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백씨와 생방송으로 인터뷰한 것을 내보기도 했다. 한국 언론의 특파원들도 취재는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신문에도 특파원들이 보내온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이런 언론의 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안기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수림 의원(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은 즉시 그 진모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언론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실고 안 실고는 그들의 자유다. 결국 언론이 누릴 자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비례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독일 현지에서 조사를 한

한 두명의 직원에 대해 밝히고 조작했다면 비디오 테이프를 조작했다는 것인 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언론에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했다. 하지만, 언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언론이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

인터뷰

안기부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김남매 간첩조작사건' 당사자
 김은주(25, 평화연구소 연구원)씨를 만나

-백홍용씨의 양심선언 소식은 언제 들었는가?
 10월 29일(토) 오전에 들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프락치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녔던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오빠인 김삼석씨에게는 언제 이 사실을 알렸는가?
 10월 31일 면회 가서 알렸는데 오빠는 담담해 했다. 왜 베를린 가서 양심선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오빠에게 안기부 직원을 확인했는가?
 면회가 한달에 두번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갖고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빠도 확실하게 기억할 수 밖에 없다.
 -재심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변호사와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안기부 직원의 신분도 확실히 밝혀졌으니 먼저 올케(윤미향씨, 김삼석씨 부인)가 작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
 -안기부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안기부에서의 7일간의 악몽은 잊을 수 없다. 안기부 수사관과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래야 우리 남매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작년 안기부가 사건을 발표할 때는 사실 확인도 없이 과장보도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침묵하는 것을 보니 화가 치민다. 언론이 언제까지 안기부나 정권의 눈치나 볼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백씨에게 할 말이 있다면?
 글썽 모르겠다. 처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잠조차 이룰 수 없었으나, 그도 안기부의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미군지프 피해자 배상금 지급 위해 노력하겠다

동두천민주시민회, 시로부터 약속받아내

미군지프에 의해 억울하게 중상당한 정형기(67)씨의 시급한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박태규(동두천 민주시민회장)·강홍구(동두천 민주시민회 사무국장)씨가 7일 농성을 풀었다. 농성을 풀며 동두천 민주시민회는 방재환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정씨의 남은 치료비는 배상금이 지급된 뒤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과 '조속한 배상금의 지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정씨의 치료비 배상을 위한 서명을 3천명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시민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군측의 불손한 태도와 명백한 피해자 정씨를 가해자로 처리한 한국경찰의 사대매국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8월26일 동두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미군지프(운전자 윌리엄 상병)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 오늘의 행사 ○

△12.12 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공동기자회견
 1시 30분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전국연합,참여연대,경실련 등 23 단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오후2시/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민주당 정책위원회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등 30여명 안기부앞 항의집회

12·12 책임자 불기소처 분과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을 규탄하는 제60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10일 오후 2시 답골공원에서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집회를 마친 민가협, 유가협, 전국연합, 진정추동성애 들어간 박태규(동두천 민주시민회장)·강홍구(동두천 민주시민회 사무국장)씨가 7일 농성을 풀었다. 농성을 풀며 동두천 민주시민회는 방재환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정씨의 남은 치료비는 배상금이 지급된 뒤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과 '조속한 배상금의 지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정씨의 치료비 배상을 위한 서명을 3천명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시민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군측의 불손한 태도와 명백한 피해자 정씨를 가해자로 처리한 한국경찰의 사대매국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8월26일 동두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미군지프(운전자 윌리엄 상병)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1면에서 계속)
 강경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방통대 교수)씨는 "이 사건은 현 정권의 그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공작활동의 피해자들은 인권피해자들이다. 언론이 이들의 구제를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씨는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보도조차 않는 언론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도 이 사건의 공범이다. 언론은 안기부와 함께 민주기본질서를 해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범(전국연합 조통국장)씨는 "역대 간첩조작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면서 "안기부가 언론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부터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국회정보위법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영(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자 후원회 회원)씨는 언론이 이런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항의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 김산환(이내창추모사업회 간사)씨는 "해바라기성 언론이 문체고, 그런 언론이 사회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독자투고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승경(회사원)씨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언론부터 반성해야 한다. 알아서 기는 그런 자세로는 언론의 자유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언론이 늦었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고 안기부의 태도를 감시해야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박정기(유가협 회장)씨는 "언론은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런 사실을 보도조차 않으면 무엇을 보도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영숙(재독양심수후원회)씨는 백씨의 정치적인 망명을 돕기 위해 국제사면위원회 법률가 모임이 돕고 있고, 백씨는 독일 엠네스티와 재독양심수후원회등이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씨는 자신의 얘기를 원고로 쓰고 있다고 전하며 기자회견이 잘 되었다고 해서 기대를 했으며 "언론이 해도 너무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언론이 안기부의 하수인으로 남겠다는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한편, 인권단체에서 이와 같은 언론의 태도는 국민의 인권 중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후속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의한 것임이 10월31일 배인오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고 말한 뒤 "작년 9월 사건 발생당시 시누이 김은주씨의 조사과정에서 조작사건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배인오씨의 연계에 의해 사건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배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묻질 않았고, 박상희(배인오씨 동료)씨를 통해 조작된 것이 드러났는데도 재판과정에서는 참고조차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이 조사중이었는데도 이미 언론에서는 남매간첩사건으로 보도하는 등 앞질러 보도한 반면 최근 배인오 양심선언은 대부분의 신문이 취급하지 않음으로 '알아서 기는'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나아가 그는 "간첩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 놓고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내는 안기부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백홍용씨 진술서

이 진술서는 이덕우, 이기욱 변호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백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백씨는 두 변호사에게 두 건의 진술서를 썼으며, 이 진술서는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약간의 제외한 것으로 맞춤법 틀린 부분을 교정한 것 외에는 원문 그대로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주

성명: 백홍용(일명: 배인오)
660918-1063335
본적: 용산구서계동38
주소: 마포구서계동373-13

본인은 1994. 11. 5. 베를린 쾰른 호텔 42호실에서 이기욱, 이덕우 임회 하에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프락치활동과 양심선언 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친구관계 가장 친한 친구로 전승희(31세) 등이 있음
취업경력 대성철공소, 동아일보 신문배달(동춘보급소), 전사개발(인쇄공보조), 기타 선반공으로 영세철공소에서 근무

운동을 하던 구제적인 동기-반월공단(전사개발)에서 파업 후 건강이 좋지 않아 운동하던 친구 신호실의 소개로 박종철 열사 추모사업회에서 일하게 됨.

프락치로 활동하게 된 동기-본인이 제작한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상영문제로 미국방문 후 귀국하자 안기부 직원들에게 연행되어 조사받음. 미주에서의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받으며 미주지역 범청학련과의 연계 등에 대하여 추궁받자 공포심을 느낌. 또한 부산 안가에서 3일간 수사관 2명이 교대로 철야 조사를 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음.

그러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안기부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출세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함. 그리고 회유가 제대로 되지 않자 큰 형이 도피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수배 중인데

언제라도 잡을 수 있으나 협력한다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협박하며 고민하다가 결국 굴복하여 협력하기로 함.

안기부 안가-부친 안가는 부친시내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며 고개를 숙이라고 하며 밖을 보지 못하게 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함. 해운대 안가 역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함. 뉴시터 파주 광탄 양어장이라고 부름. 광탄정류장에서 택시로 약 10분 정도 걸림.

구체적인 프락치 활동 내역-2일 간격으로 안기부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운동권의 동향, 개인적으로 접촉한 운동권 인사들의 사생활 등 보고.

안기부 직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일본 방문, 조총련 및 한총련 등 간부 접촉, 정보 수집, 보고-안기부 직원들의 실명 여부는 모름, 단 그들이 서로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뿐임.

94. 2. 말부터 출국하기 전인 같은 해 8. 말까지의 행적-과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프락치로 오해받을 소지는 있으나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직접적 믿을 만한 대상자를 상대로 새로운 프락치를 모색하는 작업을 함. 7.8명을 대상으로 물색하였고 최종적으로 2명이 일할 의향이 있어 보고하였으나 포섭되었는지 여부는 모름.

94.9.1. 출국 후의 행적-출국 후 범청학련에 전화하여 방문의사를 밝혔으나 겁도 나고 갈등이 생겨 미행이 있을지 모르므로 따돌리기 위하여 지하철도를 바꾸어 타는 등으로 시내를 돌아다님. 양심선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등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로 밤기차를 타고 함부르크, 로마,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권을 돌아다님. 10월 19일 박성희씨의 집으로 찾아가 신분을 밝히려 하였으나 말하지 못하고 베를린에서 안기부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있던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위협하므로 중요한 물건이라며 박성희씨에게 보관시킴. 그 다음날 박성희씨의 집으로 전화하였는데 마침 생일이라며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비디오테이프를 들어보고 어떻게 도니 일이라고 추궁하여 신분을 밝히고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고 함.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범청학련에 접촉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과장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음. 단 과장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고 과장 역시 크게 신뢰하고 있었음. 그리고 경험삼아 유럽여행을 하고 그 기회에 범청학련의 분위기를 알아오라는 지극히 단순한 지시였음. 또한 본인에 대한 기사등으로 프락치로 오인받고 있으나 가명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안기부 직원들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프락치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차츰 갈등을 느끼게 됨. 그리고 점차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기부 직원들의 얼굴을 활영함. 그리고 직원에게는 비디오카메라가 고장나 수리하려고 가져왔다고 둘러

댐. 이때까지는 명확히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음. 그런데 김은주씨 남매를 구속한다는 말리 없이 오히려 김은주씨 체포현장 근처로 불러내 감시하며 지휘한 사실을 늦게 알고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음. 또한 TV 뉴스 등에서 대대적으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생각에 공포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상태에 빠짐.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등에서 뒷조사를 하고 프락치라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체가 탈로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과장등은 시간만 흐르면 된다고 하며 지방으로 피신시키고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케 하는 것을 보고 언젠가 양심선언을 못하게 되었음. 따라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대 양심선언을 하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중 갑자기 베를린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황급히 비디오테이프를 숨겨가지고 출국하였음.

출국 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방황하던 중 이제 안기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하기로 결정하고 양심수후원 회원등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 녹색당의 후원으로 베를린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함.

이상 진술내용은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상세히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며 자세한 것은 본인 자필의 진술서와 본인의 동의하에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와 녹음테이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94.11.5. 진술인 백홍용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생」 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경찰이 발표한 피의사실을 가지고 “고교에 주사파 침투”란 제목으로 청소년단체 「생」 사건을 기사화한 동아일보사(발행인 김병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했던 강천규(청소년 단체 생 회원, 20)씨는 동아일보사와 중재가 성립하지 않아 지난 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냈다.

정정보도청구 취지에서 강씨는 “동아일보는 피의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하여 청소년 민족문화단체로 활동을 해온 「생」에 대해 국민이 주사파 조직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생」에 출입하던 학생 역시 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씨는 “대한민국 형법 제 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언론사들은 특히 공안당국의 발표를 무분별하게 취재하는 것은 관행처럼 법을 어겨 공안사건 만들기에 부심한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동아일보는 지난 9월 9일자 신문 사회면(31면) 상단에 가로 15cm, 세로 4cm 크기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고교에 주사파 침투”란 제목으로 “서울남부 지역에……주사파 조직 생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 혐의로 구속”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강씨는 “「생」은 주사파 조직 및 이적단체가 아니며 9월 28일 서울 지방검찰청에서 청구한 공소장에도 ‘이적단체’가 빠져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기간동안 동아일보에서 나온 사회부 1차장 최병호씨는 “검찰청이라는 신빙성 있는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므로 의심의 여지없이 기사화하였다”고 말하였다.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생」 회장, 2차 공판에서

청소년 단체 「생」사건 구속자 고영국씨 2차 공판이 11일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고씨는 「생」 결성취지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남부 지역에……주사파 조직 생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 혐의로 구속”이라고 보도하였다.”

고씨는 경찰수사 도중 “경찰관이 책을 읽어주거나 보여주며 내가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조서에 기재했고 항의를 하면 같은 이야기가 아

나며 넘어가곤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자주, 민주, 통일만 있으면 무조건 주체사상과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건설 의지를 결집할 전국노동자대회 12,13일 경희대서

민주노동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12, 13일 양일간 경희대학교에서 열린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등 4인, 전노대)는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이날 집회에서 전노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민주노동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87년 이래 성장해온 민주노동운동의 총결산하는 한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2면 행사 안내)

12일 저녁에는 수도권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투쟁사례 발표,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별순서 등이 있고, 13일 오전에는 전태일 열사 묘소참배를 갖고 12시부터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본대회를 가지며 행사를 마친 뒤 회기역, 청량리역, 신설동등으로 분산해서 가두행진을 펼치게 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알림 >

백홍용(가명: 배인오)씨의 양심선언 자료를 11월 11일(제284호)자에 이어 내보려 하던 것을 오는 11월 15일(제286호)로 연기합니다. 11월 15일자에 내보낼 자료는 베를린 현지 조사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반성문 안 쓴다고 퇴학 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

학교비리 다른 소식지 '감초들의 이야기'를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송경진(동일여고 3학년, 19), 김순주(동일여고 2학년, 18)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권규대 변호사가 5일 이들의 퇴학가처분 신청을 위하여 동일여자고등학교(이사장 김동섭)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학교측은 "우리는 송경진, 김순주를 퇴학시킨 적이 없으며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10일이 내 등교해서 반성문이나 각서를 쓰지 않을 때에는 열흘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퇴학시키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현재 무기정학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송경진씨는 "10월 18일 이후 학교로부터 구두로 퇴학 통고받은 이후 등교투쟁을 하며 학교에 들어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선생님들은 청소를 시키거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오늘의 행사○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2일-오후 7시부터 식전 행사/개막식/수도권지역, 업종 투쟁사례보고/집단지역/특별프로그램(서울지역야학협의회 공연, 전태일 영화 소개)/수도권 이남 지역, 업종 투쟁사례 보고-외국인노동자 주제별 소공연/대동놀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묘소 참배 (오전 8시 마석 묘소 참배, 추도식은 오전 11시에) 본대회: 12시부터 가두행진

말했다. 권규대 변호사는 "학교측(이사장 김동섭)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회적 입장을 생각하여 퇴학에서 무기정학으로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완자) 간사 홍수영씨는 "어른들의 잘못된 활동을 퇴학이나 무기정학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제단하는 것은 분명 교권 및 징벌남용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여고 교감은 "학교는 나름대로 교칙이 있고 그 교칙에 의거하여 학생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지나친 관심은 내정간섭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송경진 학생은 11월 23일 있을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 만약 반성문을 쓰지 않아 퇴학을 당할 경우 학력고사를 볼 수 없게 되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할 될 입장이 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손봉현 현대정공 위원장 제3차 개입금지 이유로 구속

10일 오후 2시 손봉현(현대정공 위원장, 현충원 사무총장)씨가 노동부 울산사무소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손씨는 지난 8월 현대정공업 창립기념식에서 연설한 것과 관련해 '제3차 개입금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손씨와 마찬가지로 이갑용(현대정공업 전위원장)씨 등 26명이 수배 및 구속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건설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는 성명에서 "손위원장의 전격 연행은 한국노총을 부정하고 민주적인 노조의 새 지평을 열어가려는 민주노총의 움직임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3면에서 계속)

93년 8월에 만들어진 출판사를 통해 『한국전주교회사』 『명예와 십자가』 『삶의 끝에 서서』 『칼을 주러 오신 예수』 등 많은 책들이 선보였다. 또한 내년 봄에는 연구소가 문을 열 준비중이다. 자료실이 될지 연구실이 될지는 뚜정을 열어봐야 하지만 지금은 사무실 한 칸을 차지하고 뿔뿔히 쌓인 책들을 정리해 가고 있다.

일상업무외에도 중요한 일은 교회 내에서의 일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이제까지 교회밖의 역할에 힘을 써왔다면 이제는 교회안에서의 역할에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팎의 제함과 탄압 속에서 사제의 양심에 입각해 교회내에서는 복음화운동을, 이사회에서는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정의구현사제단의 역할인 것이다.

시대의 양심으로 찬사를 받아왔으나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동에는 반성도 따른다. 우선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기보다는 사태발생에 뒤 쫓아가는 것이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물론 70년대 이래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던 교회의 모습을 진취적, 민족적 이미지로 부각시켜 일반인들에게 신뢰감과 친숙감을 준 것은 사실이나 내부적으로 얼마만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반성이 따르고 있다. 또한 역사적 현실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신학적 논의와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또하나의 반성이다. 교회 안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는 반성에는 이상의 숙제들이 해결과제로 나서고 있다. 거리로 나섰던 신부님들이 각 지역 성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제도적, 의식적 개혁의 사명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교회안에서 밀알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세웅신부의 말은 지금껏 거쳐 온 정의구현사제단의 길과 앞으로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사제단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를 향한 발음을 넘어서 사제단 스스로가 '현실의 한 주체'가 되었기에 가능했다"('명예와 십자가' 93.10).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 위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야, 시민단체-

검찰의 기소조치 촉구등 12·12 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연합」·「민변」·「참여연대」·「시민협」 등 23개 단체는 11일 오후 1시30분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12 주도자의 기소조치를 위한 행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수요일인 16일부터 공소시효달로일인 12월11일까지 매일 정오12시 검찰청앞 항의시위를 벌일 것과 서명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전국연합」등 23개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조치를 촉구하면서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항고단계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방지를 위해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중범죄에 대한 기소범정주의 채택,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김수경>

단체탐방 3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우리 할머니들 시절, 가을걷이에 나선 주인은 자신도 넉넉하진 않지만, 먹을 것을 찾아 추수가 끝날 발을 찾아올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작물을 다건지 않고 남겨놓았다고 한다. 뒤이여 찾아온 그들은 그것을 걷어가면서 또 뒤에 찾아올 이들을 생각했고, 그 뒤에 찾아온 사람들은 눈내린 뒤 먹이를 찾아

사제들은 침묵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결성을 예비한 이로 대 표되는 인물은 지학순 주교이다. 원주교구장이었던 그는 유신시대의 폭정 속

동일방직노조탄압 사건, 79년 오원춘사건등 이루어야 될 수 없이 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정의구현사제단은 함께한다. 10·26 사태 후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구명운동을, 광주

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구를 뛰어넘는 사제의 서로의 연대와 협력을 가져왔다. 피정과 세미나를 겸한 정례 사제단회의는 사제 서로간의 친목과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좇아 민주화·인권의 실현을 위해 나선 신부님

에서 71년 10월 5일 사흘간 원주 문화방송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운동을 일으킨다. 지구교가 앞장서 시위와 농성을 벌인 이 사건은 정의평화운동의 중심으로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그리고 농성끝에 원주교구는 상설기구인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지구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유신 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마도 여기서 그쳤다면 정의구현사제단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긴급조치 시대가 이어지는 속에 박정권은 74년 7월6일 해외에서 돌아오던 지구교를 '민청학련에 대한 자금 제공과 내란 선동, 정대사의 20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현장의 중심에서 때로는 주변부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온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우리사회는 60, 70년대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민중의 삶은 70년 11월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씨가 분신자살을 하는 사건으로 대변된다. 그리고 또다시 71년 8월 '토지불하 가격인하와 세금면제' 등을 내건 경기도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위는 3만여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대표 선언운동, 75년 서울대생 김상진군 자결사건, 76년 김지하구명운동, 3·1절 명동성당 기도회 사건, 77년 러낸 사건이었다. 그때까지

민중항쟁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와 규명을,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부천 성고문 사건 후에는 고난받는 이들과 고통을 나누는 신부들이 있었다. 박종철 군 고문사실 사건 때, 고문사실을 사회에 알리던 김승훈 신부의 목소리는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통일운동의 방북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는 가슴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신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휴전선을 넘어서던 모습이 다. 87년 6월항쟁 시청광장 앞 시위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누이던 명동성당은 전교조선성당들의 단식농성장이 되는 등 정의와 양심의 횃불이 밝혀지는 성소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나갔다. 이렇듯 정의구현사제단은 이 땅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냈다.

시대의 요청에 용기롭게 대처해왔던 정의구현사제단이 있기 에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쏠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 사이에선 '정의구현사제단이 너무 잠잠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 내부에서는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조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속에서 정의구현사제단 역시 그 중의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역사의 현장을 숨가쁘게 달려 온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렇다할 조직틀도 규정도 없다. 공동대표로 김승훈·김병상·함세웅 신부가 있고, 전국의 2천여명의 사제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주요사안에 접할 때마다 필요성에 의해 서로를 모이고 힘을 합쳐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로 해화동의 뒤편으로 위치한 정의구현사제단은 이와같은 일을 진행시켜온 사무국이 자리잡고 있다. 사무국장 최경욱씨를 비롯해 상근자 5명. 역할 분담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일이 맡겨진다. 별달리 움직임이 없어보이지만 큰 강을 향해 흐르는 생각처럼 정의구현사제단의 숨은 움직임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주간소식지 <빛드레>를 발행하는 일과 도서출판 '빛드레'를 운영하고 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육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루가 4:18-19)

사제단의 결함은 교회 내

(2면에 계속 ---)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동티모르 인권문제 등 APEC회담에 대한 입장 표명 오늘, 민간단체 공동기자회견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민간사회단체(NGO)의 공동 기자회견이 국내의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린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개막식과 같은 시간에 열리는 민간단체 기자회견은 동티모르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핵무기와 환경파괴, 역내의 노동력 이동에 따른 문제, 초국적기업의 통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 등 아편이 아대지역의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작년 11월 시애틀 아펙 정상회담 이후 국제화 바람이 급격히 몰려들면서 이른바 ‘국가경쟁력’ 이태올로기가 개혁국면을 왜곡, 중단시켰던 사실을 경험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으로 국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준비되었다.

공동기자회견의 실무간사 역할을 담당한 기사연의 박종아 연구원은 “비록 아편이 초기단계이지만 UR 파동에서 보여졌듯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방비 상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국제화 시대의 현실이다”며 “실천적 대응책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시민, 사회단체가 처음으로 국제

파출소내 비리 폭로 경관 파면처분 지나치다 총무처 소청심사위 해임처분으로 변경토록

11월 14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양경경찰서 신정1파출소 김석원(45·전경장)씨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경찰청의 파면처분은 김 전 경장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친 처분이기 때문에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경장은 지난 8월 23일 파출소내 비리와 관내업소에 대한 월정금 수수 비리를 SBS등 언론에 폭로한 사실로 인해 징계위에 회부돼 8월 29일 파면되었다. 그 뒤 9월 16일

문제에 공동의 입장을 모은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추진위원회, 기사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국내의 주요 재야·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참가한다.

민주노총 준비위 발족 13일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양규현등 4명)는 13일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노동자 대회를 경희대에서 3만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노동자대회를 통해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업종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등은 해체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어용노조해체, 민주노총건설 △노동약법 철폐 △산별노조건설 △국가보안법해체, 양심수석방 등을 주장하였고 앞으로 민주노총건설과 사회개혁 운동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 공 판 안 내 ◆

- 11월 15일 (화) 김우중외, 특가법위반(뇌물), 10시, 311호, 합의22부 김재용, 인영인등, 국보법(구국전위), 2시, 318호, 합의25부 이상철, 국보법(김청동), 10시, 319호, 합의23부
- 11월 16일 (수) 최도영, 양내조, 이종렬, 국보법(김주석조문), 10시, 2시, 3시, 311호, 합의21부, 1회 차현민, 국보법(김청동), 3시, 318호, 합의25부, 1회
- 11월 17일 (목) 안재구, 국보법(구국전위), 4시, 311호, 합의21부, 7회 박병찬, 출판 명예훼손, 11시, 317호, 3단독 설 훈, 정치자금법, 11시, 합의2부
- 11월 19일 (토) 정화려, 국보법(구국전위), 10시, 합의 21부, 6회

『안기부 프락치에서 양심선언까지』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전모 비디오 테이프 판매중—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씨 양심선언 내용, 안기부 수사관들의 얼굴이 생생히 담긴 비디오 테이프 실가 판매
 개당 6,000원 10개 이상 구입시 개당 5,000원씩
 구입처 전국연합(747-4364.5)

자료/ 백홍용(가명: 백인오)씨 양심선언 베를린 현지조사보고서(요약)와 독일 현지 신문 보도

백홍용(배인오)씨 양심선언 조사보고서

(11월11일자 <인권하루소식> 3면에 실린 백씨의 진술서에서 에기된 부분은 생략함-편집자 주)

1. 김삼석, 김은주 남매 조작간첩 사건의 개요(생략)
2. 민변의 이기욱, 이덕우 변호사가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한 백홍용(배인오)씨를 만나러 간 경위
 가. 김남매사건 변호인이기욱변호사가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와 김은주씨로부터 백씨의 양심선언 보도자료를 94.10.29. 오후 4시경 이번회사 사무실에서 받아보았다.
 나. 94.10.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위 양심선언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4.10.31. 긴급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기욱, 이덕우 변호사를 베를린으로 파견하여 백씨의 양심선언 내용의 신빙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결정, 11.2부터 11.7까지 두 변호사가 베를린으로 가서 백씨와 녹색당관계자, 엠네스티 관계자 등을 만나고, 백씨가 촬영한 김남매사건 조작 실무자 안기부 김성훈 과장과 운동한씨의 얼굴이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와 김남매사건 이후 약 4개월간 거주한 파주의 광탄양어장(낚시터)으로 가는 동안의 김과장, 윤씨, 백씨, 운전기사의 대화내용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하고, 백씨와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비디오로 촬영, 제반 내용에 대하여 진술서 2통을 받아 귀국하였다.
3. 백홍용(배인오)씨가 안기부 프락치가 된 경위

- (생략)
4. 백홍용(배인오)씨가 안기부 프락치 활동한 내용(생략)
5. 백홍용(배인오)씨가 파주 근처 광탄양어장에 약 4개월간 피신한 경위와 안기부 김성훈 과장과 운동한씨의 얼굴이 찍힌 비디오를 촬영한 경위
 가. 93.10.28경 김남매사건 대책위에서 안기부 프락치의혹제기 기자회견을 한 후, 김성훈과장이 백씨에게 몇달 낚시터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 그때 백씨는 “내내 창이 왜 죽은 줄 아느냐?”면서 험박한 사실이 생각나 겁이 났고, 박사회씨에게 백씨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의심받는 것 등이 걱정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 백씨는 93.10.30.경 신내 약혼식 촬영을 하던 중 밖으로 나와 안기부 김과장과 운동한을 만나 자연스럽게 비디오카메라를 손에 들고 몰래 그들의 얼굴과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였다. 김과장등을 약혼식장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한후 계속 약혼식을 촬영하고 그 테이프를 친구에게 보관시켰다.
 백씨는 안기부의 차량에 탑승하여 낚시터로 가며 비디오카메라를 몰래 작동시켜 김과장과 운동한, 운전기사들을 촬영하였고 중간에 안기부 직원들에게 의심받지 않게 카메라렌즈 뚜껑을 닫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6. 94.2월부터 출국하기 전인 94.8월까지의 백홍용씨의 행적(생략)
7. 백홍용씨가 출국하게 된 경위
 94년 8월 중순경 김성훈

과장으로부터 여행경 독일(베를린)에 갔다가 오라는 지시가 있었고, 8.31.안기부 근처 크리스탈 다방에서 김과장으로부터 “내일 출국할 준비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안기부로 안내 받아 인사를 했다.
 사장이 한 말은 “범청학련에게 네가 노출되어 잡힐 경우 우리의 관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된다. 너를 노출시키는 날에는 그들이 아니면 다른 쪽에서 널 죽일 수도 있으니 절대 노출시키면 안된다”라는 내용이었다. 김과장, 운동한, 이선생과 식사할 때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먼저 범청학련의 분위기와 국내에 연결된 사람이 있는가만 알아내라, 그런 후 한달간 여행을 하고 귀국 3일전 전화를 하면 공항으로 나간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16시경에 새여권과 비행기표, 여행경비(약300만원)를 받아 공항직원들만 다니는 문을 통해 출국심사도 받지 않고 18:30분발 케세이 퍼시픽편으로 출국하였다.

독일 현지언론 보도내용
 (현지언론들은 이 사건을 거의 모두 다루고 있다. 그중 두 신문과 녹색당의 기자회견문을 발췌한다-편집자 주)

□1994년 11월 4일타게스짜이퉁 22면
 그(백홍용)는 비밀정보부의 지령에 따라 9월 1일 새로 막 만들어진 여권을 들고 서울 큰 공항인 김포를 떠났다. 그의 목적은 범청학련 베를린 활동가들의 비밀을 탐지하는 것이었다. 안기부의 암호명 “진달래”와 암호번호 53을 부여받은 백씨는 범청학련과 연결된 남한의 활동들을 전화로 지령전달자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한다.

□동맹90/녹색당 신문국 기자 회견문
 동맹90/녹색당의 프락션은 연방정부에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남한 정부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안기부”가 독일에서 사용하는 한국인들에 압력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남한의 정치적 박해자는 정치적 망명을 얻어야 한다. 94년 11월 11일

□94년 11월 1일 화요일 17면 노이에스도이칠란트 베를린에 사는 약 2천명의 한국인들과 더 나아가 오래전부터 독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서울의 비밀정보부인 안기부로부터 감시당하고, 정담하며, 적지 않게 위협받는다. 학생들의 남한 재야와의 접촉을 탐지하는 임무를 가진 안기부 정보원의 한 일원은 어제 의회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안기부의 술책을 폭로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보상신고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아 형식적인 발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종합대책에서 "14개국 재외공관에서 외국인재해보상신고센터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되, 현지정부, 언론,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이를 홍보 접수하여 신고된 사람은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가능성이 확인되면 보상금은 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송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내 45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노동자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출국 전 체불임금, 산재보험 등에 관한 안

내 팜플렛을 공항이나 항구에 배포하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는 "9월부터 신고기간을 정했는데 두달이 지난 11월 15일까지 해외공관에 전문은 전송되었으나 내팔을 제외하고는 외신언론에 이런 사실이 전혀 보도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노동부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전도사는 "국내에 설치하겠다고 민원신고센터도 기존의 지방노동사무소에 간판만 걸었을 뿐이고 지

시공문을 보낼 때 기존의 지방노동사무소에 간판만 걸었을 뿐이고, 외국인노동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 민원신고센터의 영문 이름조차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홍보물을 출입국 관리소에 복사하여 비치해 놓겠다고 했으나 만들어진 것이 없고 배포원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는 12월에서 95년 1월 약 두달 동안 중국, 서남아시아, 필리핀을 방문하여 산재당한 외국인 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등 APEC에 요구

15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가운데 같은 날 국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들이 오전 10시 세실레스트랑에서 아펙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참여연대", "기사연" 등 8개단체는 지난 아펙의

논의과정에서 민간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APEC에서 다루는 무역·경제문제가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에 의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보장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력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

'샘'사건 김용우씨 2차공판

청소년 단체 '샘'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우씨의 2차 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재판장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김용우씨는 주체사상 인지여부에 관해 "사람과 세계"는 주체사상인줄 모르고 본 책이며 나중에 주체사상과 관련된 책임줄 알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들어가는 김용우씨에게 방청객으로 온 친구들이 박수를 치자 재판부는 재판을 12월 6일에서 13일로 연기하였다.

독제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파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해결, 지역내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일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제적 기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환경보호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등을 담은 사회헌장(Social Charter) 제정과 아태지역 '사회 또는 인권위원회' 설립 등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정부측에 원전 레이온기계 중국수출 중지, 국가보안법·노동법 독소조항 폐쇄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아시아 각국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핵발전소의 수출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인권소식

APEC회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는 다른 입장이 12일 아시아지역 민간단체에서 발표되어 이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경제개발은 아태지역 민중,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산업구조조정계획(SAP)'과 NAFTA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제적 자유화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경제개발에 민중중심적 접근(People-Centered Approach)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경제개발은 민중의 적극 참여없이 성취될 수 없다. APEC 자체는 회원국의 입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정부들은 자국 민중의 관심사에 항상 민감하지는 않다. 민간단체(NGO)들의 네트워크가 아태지역에 발전되어 자신들의 관심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PEC의 발전과 관련, NGO의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APEC의 과정과 성격 / △APEC을 통한 지역내의 경제정책 조정이 국가주권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권리와 인권의 보호없이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춤 / △무기 교역에 대한 통제를 비롯하여 정부와 조국적 기업에 대한 자유화와 이들의 윤리적 책임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 / △경제자유화와 공개적인 경쟁을 예를 들어 노동, 환경, 안전에 관한 최저공통기준을 가지고 '무환경쟁'을 만들 것이라는 위협 /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진정한 안정 대신 억압을 통한 거짓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유인하려는 압력 /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산업구조조정계획과 APEC을 연결하는 것.

NGO들은 보고르 APEC 회담을 맞이하여 APEC에게 아래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실무그룹, 상임위원회, 저명인사그룹(EPG), 사무국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NGO와 부문 대표자들이 함께 공식회담에 들어가야 한다 / △초국적기업(TNC)과 정부가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 △APEC 과정과 경제자유화 과정이 아태지역내의 민중, 특히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 △지역 NGO와 부문 대표자들의 협의하에 사회헌장(Social Charter)을 발전시켜 경제개발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 △시장 주도가 아닌, 생태 중심의 환경 전략을 촉진해야 한다 / △'이주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관한 유엔선언'과 같이 경제자유화 과정에서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협약의 비준을 촉진해야 한다 / △APEC의 모든 회원국정부는 언론, 조직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APEC의 모든 논의에 노조를 포함한 국가 NGO와 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태지역 NGO들의 네트워크는 APEC의 진전과 협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조를 수립할 것이다.

1994년 11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장)

백홍용(가명:배인오)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안기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법(이하 안기부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판이다.

이 개정 안기부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이다. 구법이 얼마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면 아직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이라는 찬사를 보냈을까 싶다. 먼저 인권차원에서 개선된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안기부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균형법중 반란죄, 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 이적의 죄에 대한 패지가 그것이다.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공여지죄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동,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안기부원의 불법체포·감금죄 신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조항의 신설은 미흡하나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겠다. 무소불위의 안기부가 나름대로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자탄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같은 전향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권보장차원에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수사권을 축소하였다고 하나 형법중 내란죄, 반국가단체구성죄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존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주장하듯이 국내정보와 수사업무는 경찰, 검찰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음성적 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의 보루인 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는 기관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안기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행사의 막강함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근거부재 자체가 인권유린을 암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슬하게 주장되고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안기부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발전적 해체가 요청되며 더불어 안기부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역사의 뒤안으로 보내져야 할 이데올로기를 부여안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안기부와 안기부법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암초로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더욱더 그 폐지는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우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김청동 사건, 신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지난 8월 '김일성주의 청년동맹(김청동)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김청동 결성여부를 부인하는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당시 김청동사건 조작성에 대한 의혹을 깊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구속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3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을 들춰내 혐의를 둔 점에 대해 김주석 조문과동, 박홍총장 발언 등 지난 신공안정국의 추세에 편승한 것이 아닌 가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김청동 사건으로 구속된 고대생 10여명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차현민·장진구씨등 피의자들은 단지 주체사상등을 학습한 모임일 뿐 김청동을 결성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6시 45분 서울 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차현민(28)씨는 "90년 「한별회」 해체식을 한 것일 뿐 김청동 결성식은 없었다. 단지 이후에 결성하자는 말이 언

급되었을 뿐이다"면서 김사측이 발표한 김청동 강령이나 규약등은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차씨는 91년 8월부터 대학원 준비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6월 석사논문이 통과된 뒤 구속당시 광고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원서접수를 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후 김청동이 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기억조차 회미한 과거의 일로 구속되어 당황하였고, 과거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속된 뒤 조사과정에서 이제까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며 울먹이기가 했다. 한정화변호사는 "사건발생 당시 언론들은 결성식이나 김청동 조직이 현존하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과대포장해 발표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가족, 대학원동료등 40여명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는데 앞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4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차씨의 첫

재판은 검사신문, 변호인반대신문, 최후진술등이 모두 40분만에 이뤄졌고 차씨는 정역 4면,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참여연대, 전국연합,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국민회의, 민가협 등 「12.12 반란자 기소 촉구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23개 참가단체 회원 70여명은 16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 근처 이화여자고등학교 후문에서 「12.12 반란자 기소 촉구 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이삼열씨는 개회사에서 "과거청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수 없기 때문에 12.12는 반드시 공

정한 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단체를 대표해 연설한 전 감사관 이문옥씨는 "검찰의 12.12 반란자에 대한 기소유에 결정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으로 12.12 반란자에게 무죄를 인정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김영삼 정부는 66%에 이르는 국민의 기소 바램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국민회의 조직위원장은 결의문에서 "12.12 반란자에 대한 재판회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군의 기강을 확립위한 가장 중요한 사법적 관문이다"고 밝히며 "△12.12 반란자 기소 △12.12 반란자 체 연석회의, 23개 참가단체 회원 70여명은 16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 근처 이화여자고등학교 후문에서 「12.12 반란자 기소 촉구 대회」를 가졌다.

연석회의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12.12 반란자 기소 촉구 집회를 갖고 각계각층 원로 및 지도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기부 프락치에서 양심선언까지』 -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전모 비디오 테이프 판매중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씨 양심선언 내용, 안기부 수사관들의 얼굴이 생생히 담긴 비디오 테이프 실가 판매

개당 6,000원 5개 이상 구입시 개당 5,000원씩
구입문의처: 전국연합(747-4364,5)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능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인권간행물◆

최태호 이교 의문사 갈수록 의혹 증폭 오늘 대책위 결성, 항의집회도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소장 안우영)에서 의문사한 최태호씨(11월 5일자 제280호 참조)의 의문사건 상규명을 위한 대책위가 오늘 결성된다.

최씨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안동 성소병원 영안실에서 재부검을 요구하며 장례를 거부하고 시신을 지켜왔다. 유족들은 최이교의 사건을 지역의 각 인권단체와 재야단체에 알려내고 서울의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도움을 얻어 그동안의 가족대책위원회를 지역대책위로 전환하게 되었다. 대책위에 참가하는 단체는 안동지역 NCC, 전교조 경북지부, 안동농민회, 안동대 총학생회, 안동택시노회 등이며, 대책위 사무실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에 두고 있다. 대책위 위원장에는 김재문 신부(목동 성당 주임신부), 이천우 목사(안동지역 NCC인권위원장)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9시부터 있기로 하였으나, 대책위 변호사와 유족이 참가하는 것을 교도소측이 완강히 거부하여 이에 항의하는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때 유족이 들고 있던 비디오카메라가 부수지기도 했다.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있을 교도소 앞 항의시위에는 유족, 대책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유가협 박정기 회장(고 박종철 열사 부친)이 참석한다. 한편 유족이 요구하는 재부검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한교협인권위, 네번째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삼근 목사)는 6만여명에 이르는 재소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재소자 겨울나기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로 네번째이며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인권상황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재소자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교협 인권위에 의하면 교도소내에 겨울에는 월동용품이 제대로 공급되지않아 동상이나 독감등 질병에 걸려 출소후에도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교도관들도 교도관 한사람이 재소자 4.1명을 담당하는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교협 인권위는 '재소자 겨울나기후원사업'을 통해 전국 38개 구치소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담요, 보온물통, 영지금, 성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성탄절과 설날에 보낼 예정이다. 모금기간 94년 11월 15일-12월 31일까지 ☎ 764-0203로 문의하면된다.

□분단조국의 희생양, 조작간첩(자료집)

-천주교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322-1774)
· 주요내용:조작간첩사건과 일본사회(서준식)/이강형, 신귀영,강희철,손유형씨 사례/사업계획안 등(42쪽)

□유독가스누출참사 보팔을 잊지말자!

-인도보팔참사10주년기념 한국행사위원회
· 주요내용:보팔을 잊지말자!(이종훈)/한국고엽제피해의 현황과 대책(임종환)/원전레이온 기계수출을 반대하며(박석운)/지금도 계속되는 온산병 문제(이지영)/ 화학공장 대형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김은희)(33쪽)

□검찰권운동, 이대로는 안된다-경실련(☎741-7961)

· 주요내용:검찰불신의 원인과 검찰권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석연변호사) 11쪽

□정책토론회-민주노총 무엇을 하나

-민주노총건설 추진위원회
· 주요내용: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김금수)/민주노총 무엇을 해야 하나?(김유선) 57쪽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393-4662)
· 주요내용:무의미한 고난과 하나님 생각(심광섭)/통일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박수미)/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국민 노동자 피친척'을 찾아서(박승복)24쪽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 주요내용:신체접촉, 우리문화에서 어떻게 보아왔나(조옥라)/성희롱, 왜 권력의 문제인가(심영희)/성희롱, 왜 고용상의 성차별인가(조순경)/신체접촉, 왜 수인한도 밖인가(이은영) 46쪽

□보도와 명예훼손-한국언론연구소(☎275-4932)

· 주요내용:언론자유와 인권(김동철)/명예훼손보도의 유형과 발생원인(임병국)/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안상운) 등 370쪽

□한두레-마창지역 양심수 후원회(☎67-2075)

· 주요내용:긴급특집-고 임종호동지를 추모하며/임종호 동지 사망경위/나도 한마디-석방소감(김동현)/참교육의 현장에서-도덕성 상실 집단 증후군(김용택) 등 15쪽

□우리네 아이들 10월호

-지역탁아소연합회(☎275-8505)
· 주요내용:일하며 생각하며-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하며(정병호)/긴급진단2-어린이 폭력 영상물 노출, 이대로는 안된다(문용린)/특집2-영유아보육법등 개정법률안 등 80쪽

□함께걸음 10/11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만나고 싶었습니다-구스노끼 도시오 일본 전국장애 자해방운동연합회의 의장 (이태곤)/조점-흔들리는 '고용 촉진법', 비틀거리는 '장애우노동법'(전홍운)/한국특수교육100주년 기념 기획시리즈<8>-특수교육에 대한 공격적 임의 확대와 그 한계(김병하) 등 85쪽, 값2천원

□철도청 환경오염 실태조사 보고서

-시민교통환경연구소·한화국민민주당국회의원실(☎)
· 주요내용:철도청 환경오염 실태/향후 개선방안 56쪽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구국전위 안재구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구국전위」 사건으로 지
 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사
 형이 구형되었다. 17일 서
 울지방법형사지법 합의21부
 (주심 윤강렬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사는 논
 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
 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
 과 규약등을 통해 반국가
 단체를 구성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
 는 10여건의 주체사상 문
 건을 배포했고 수사차레
 북의 지령을 받았으며 총2
 억여원의 공작금을 받는등
 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안씨는 79년 「남조
 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남민전)사건으로 구속되
 어 80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 88년 대구교
 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
 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
 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을 구형하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세완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등
 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

당과의 무관하다고 증언했
 다"고 말했다. 반국가단체
 임을 증명하는 것은 구국
 전위 결성축하문밖에는 없
 는데 이 역시 제보문에 따
 른 것으로 성명불상의 반
 국가단체구성원이 정화려
 씨와 만나기 위해 입국 10
 분만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검거하지
 않고 그뒤로도 4차례나 만
 남을 묵인한 이유는 무엇
 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구
 국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한
 것에도 정화려씨등 많은
 증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10여명의 회원으로
 국가전북을 피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
 다.

그리고 피고인 안씨가 보
 낸 보고서는 조직적 차원
 의 의결이라기 보다는 안
 씨 개인의 견해를 뿐이
 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국
 전위의 결성축하문의 유일
 한 증거인 제보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은 구성요건이 불충분하
 는 것이다. 나아가 "주체사
 상을 추종했다는 이유만으
 로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

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
 했다. 주체사상이나 주사파
 를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흑백논리이며
 경제인들이 북한의 주사파
 들과 협력을 피하는 이때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재구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형구형에 일벌말하다고
 말한 뒤 차분히 준비된 원
 고를 읽어내려 갔다. 안씨
 는 "광명조직을 만들고 이
 름을 구국전위라고 불린
 것일 뿐이며 결성축하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문건
 은 조작되었고, 그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
 다. 광명조직의 강령, 규약
 등을 몇사람에게 보여준
 것이고 사실과는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안기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혔으나 묵살당해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전직
 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칠
 순이 넘는 류낙진씨나 자
 신을 믿고 심부름을 한 것
 뿐인 정화려씨들에게는 관

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안씨는
 "자신은 국가 반란이나 파
 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남북분단을 청산하고 민족
 공동체로 새사회를 창조해
 나가자는 의도였음을 해아
 려주길 바란다"며 최후진
 술을 마쳤다. 선고공판은
 11월 30일 오전10시.

최태호 이교 대책위 출범 재부검 요구 관철

최태호 이교 의문사진상
 규명대책위(위원장 김재문
 신부, 대책위)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안동교도소(소장
 안우영)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재부검을 강력히 촉
 구했다.

안동지역의 종교계, 재야,
 노동자, 학생 조직이 망라
 된 대책위 결성식을 함께
 가진 자리에서 △범무부장
 관의 공개사과 △교도소장
 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
 했다.

한편, 사건을 맡은 안동
 지청 변찬우 검사는 유족
 과 대책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재부검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1시 변
 호사 입회하에 경북대 병
 원에서 부검하기로 했다.

○ 오늘의 행사 ○

△ 윤석양 이병 출소 환영회

오후6시/ 기독교백주년기념관 2층 그릴
 주관: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766-4979)

△ 정책토론회-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교육

오후2시-5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토론회 2-90년대 한국사회,지존파,사법정의

오후4시/이화여대 인문관 대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796-8364)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능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부산신씨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
 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이돈명 등)는 16일
 부산 신씨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
 구하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
 거해서 무죄를 인정할 명
 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
 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확신한
 다"고 재심청구 사유를 밝
 혔다.

신귀영씨는 원양어선 선
 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친형 신수영씨를
 65-79년까지 7차례 만나
 모친의 안부를 묻고 결혼
 축의금과 모친에게 용돈을
 보낸 것이 '조총련계 형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것'으
 로 조작되어 81년 대법원
 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친척인 신춘석, 서성철씨도
 신수영씨를 만나 간첩행위
 를 한 것으로 조작되어 대
 법원에서 각각 10년,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문변호사는 93년 2차례
 일본방문을 한 결과 신수
 영씨가 "나는 조총련 간부
 인 적이 없고 서성철과 신
 춘석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동생을 몇 번 만나
 용돈을 주기도 했으나 간
 첩을 지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
 요하다면 한국법정에 출석
 하여 위 사실을 증언할 것
 을 약속했다. 80년 당시 신
 씨는 일본에 살고 있었고
 자신이 간첩 지령자로 되
 어 있었기 때문에 귀국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
 다.

문변호사가 부산신씨일가
 의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확인하는 또다른 이유로
 불법연행과 불공정한 재판
 을 들었다. 신귀영씨는 80
 년3월25일 부산시경 대공

분실로 구속영장없이 연행
 되어 78일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심한 고문을 받
 았다. 신춘석씨도 그해 3월
 24일 영장없이 연행되어
 50일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서성철씨는 3월 7일 영장
 없이 연행되어 70일동안
 불법구금 당했다. 서성철씨
 는 고문에 의한 후유증으
 로 19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도 신
 귀영씨등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임을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고문은 물론 장기
 불법 구금도 외면한채 검
 찰에서 한 자백을 근거삼
 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
 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고
 말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
 에 따르면 "형의 면제 또
 는 원판결이 인정된 죄보
 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
 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
 부」에서는 연말을 맞아 카
 드를 판매하고 있다. 세계
 의 유명화가들의 담긴 연
 말카드의 판매수익금은 인
 권침해 희생자들을 돕는데
 쓰인다고 한다. 모두 7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 카드는
 3천원에서 4천원에 판매된
 다. 구입처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2-1956).

□ 「고난받는 이들과 합
 계하는 모임」에서는 95년
 천 달력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달력크기는 가로40,
 세로74센티미터이며 가격
 은 3천3백원. 또한 주문제
 작을 받는데 크기는 가로
 72 세로55센티미터로 가격
 은 3천8백원이다(문의 ☎
 393-4662).

국제엠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요청

*** 국제엠네스티는 11월 16일자 News Service를 통해
 백용용씨의 양심선언과 관계된 내용을 보내왔다. 엠네스
 티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 이후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석
 방을 요구했다.<인권하루소식> 93.9.18일자 1면 참조>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국제엠네스티의 문건을 번역하
 여 전문을 실는다.

국제엠네스티는 전 남한 정보부 요원의 진술에 따라, 남
 한 정보부가 제공한 허위 증거에 기초해 유죄판결과 선
 고를 받은 한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국가안전기획부(NSP, 안기부)의 활동에
 관한 우리의 조사결과를 더욱 뒷받침하는 것" 이라고 국
 제엠네스티는 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최근 몇 년간의 사례에 비추어, 재야나
 그의 정부비판자들이 안기부가 제공한 과장되거나 또는
 거짓된 정보로 인해 국가보안법(NSL)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김삼석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씨는 93년 9월 국가보안
 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진북조직
 접촉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 또는 북한 사람과 허
 가팔지 않은 접촉은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간첩"
 개념은 폭넓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종 표현과 결사의 자
 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을 유죄판결 받게 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난 달 전 안기부 요원은, 93년 중반경 안기부의 김은
 주, 김삼석 사건을 "조작" 하려는 계획을 들었다고 주장
 했다. 그는 김은주씨를 포함하기 위해 친북 문학서적 한
 꾸러미를 김은주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92년부터 일본에 있는 친북조직과 남한에 있
 는 인권단체를 포함한 몇몇 비정부 정치조직들 사이를
 연결시켜 죄를 덮어씌우도록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국제엠네스티는 남한정부에 안기부가 두 활동가에게 유
 죄판결을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공했다는 진술에 대
 해 독립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인권조직은 김삼석, 김은주씨에 대한 혐의가 근거없다는
 이유로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다. 2월에 김은주씨는 집행
 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김삼석씨는 서울에 있는 영등포
 교도소에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엠네스티 대표들이 10월에 김삼석씨를 만나러 시도
 했을 때, 그를 만나는 것이 그의 "재교육"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김은주씨는 안기부에서 심문받은 17일간 발로 체이고
 빵을 맞는 등 가혹행위가 반복되었다고 10월 국제엠네스
 티에 말했다. 또한 4일간 잠안재우기 고문을 받고 성적
 희롱을 위협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오빠 김삼석씨는 심문
 하는 동안 맞고,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말
 했다. 국제엠네스티가 아는 바에 따르면, 남한 당국은 이
 러한 가혹행위에 대해 어떠한 독립된 조사도 하지 않았
 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말라

합주명씨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합주명(월남자 사건, 무기수 12년제 복역중)씨등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될 수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의도 피자 시효정지제도 및 부실 시공에 대한 공소시효 변경등이 검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에도 보듯이 검찰 스스로도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사건을 기각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처벌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주명등은 지난 9월 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했다.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은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가장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범죄행위인 이번 고문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를 문민정부의 인권보호의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공소시효 정지나 취소의 방법으로 이들의 재항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본지 9월6일자 242호 참조>.

재항고 제기자 명단
 합주명, 황대권(구미유학생 사건, 10년제 복역중), 정영(납북어부사건, 12년제 복역중), 석달윤(행불자가족사건, 15년제 복역중), 박근홍(행불자가족사건, 15년제 복역중), 박동운(행불자가족사건, 14년제 복역중), 양동화(구미유학생 사건, 10년제 복역중),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 10년제 복역중), 김대룡(월남자가족사건, 16년제 복역중), 이상철(납북어부 사건, 12년제 복역중), 김양기(일본관련 사건, 7년 복역후 석방)

주민참여가 지자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정책토론회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을 1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연구소 강당에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점룡(전주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이석무(서울시 교육청) 장학관등이 발제를 했다. 윤교수는 발제문 '교육자치제와 장애인교육'에서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원의 국고의존도가 83%이상되는 등 지방분권이 형식적이며 교육감 자격이 교육전문가 경력 20년이상인 자로 정한데서

정한데서 오는 전문적 활동력 상실"을 들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서 자치행정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위원과

제8회 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대상 : 인권증진에 공헌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추천기간 : 11월 25일까지
 ·추천방법 : 추천자, 추천이유를 명기
 ·보내는 방법 : 우편이나 팩스
 ·주소 : (우)110-470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인권상 시상식 : 12월8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2층강당
 자세한 문의는 전화 764-0203 / 팩스 744-6189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교육감 선출에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체제가 지방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자치시대의 장애인교육의 근본 대안으로 △지방특수교육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무화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과 개별화 교육의 실현 등을 강조했다.

윤석양 출소환영회 열려

90년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양심선언한 윤석양씨의 출소환영회가 '양심선언 군경지원대책위', '참여연대', '내부비리교발자 지원센터', KNCC, 「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등 4개단체 주최로 18일 오후6시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환(KNCC 총무)·권진관(참여연대 내부비리교발지원센터 부소장)·서경순(민가협 상임대표)·권오현(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씨등이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단체탐방 35 / 참사람 썬터

한 인간이 자기 몸을 팔아 먹고 살아가는 경우, 그게 '개인적 타락'이지 어떻게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냐라고 말한다면, 창녀들은 물론 월한다면 옷을 벗을 수 있는 매춘자녀자들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인들이 백만 명이 넘어선다고 할 때 국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매매춘 사업이 조직적 구조적으로 국내에 주둔한 외국 군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50여년전 정신대 문제는 또다른 이름으로 오늘 한국에서 은밀하게 때로는 치욕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한 미군 한국주둔 50년사는 우리 근현대사의 치욕과 아픔의 상징 그 자체이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굴레가 되어 현재 우리의 누이와 어머니를 가두고 있다. 그 아픔의 끝자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송탄의 '참사랑 썬터'(대표 김연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들도이다.

미군기지는 현재 의정부, 동두천, 군산등 1백80여개로 이중 송탄의 '오산 미군공군기지'는 국내 최대의 단일기지로서 이곳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 문제는 다양하다. 미군범죄, 몸파는 여성의 인권, 혼혈아 문제등.....

혼혈아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이 이들을 누를뿐이다. '참사랑 썬터'는 바로 이들의 공간이다. 여성에게는 영어교실과 한글교실을 강의하고 있으며 4-6세 혼혈아들을 위한 놀이방과 7-16세 혼혈청소년을 위한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

우리는 매춘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육을 하는 공부방등을 운영한다. 보통 혼혈아들은 어머니 한국인의 국적을 따르다고 한다. 7세가 되면 국민학교 입학통지서가 나오지만 인건 교육이 부족한 우리 제도교육에서 혼혈 아들이 겪는 차별이란 짐작이 간다. 검은 색 눈동자에 갈색머리, 검은 피, 흑시나 하는 바램에 이름은 아버지를 따라 김책순, 박스티분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선생님의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썬터 방에서 공부하고 큰 아이들은 가정용 방문하여 학습지도와 하고 있다. 현재 2명의 박사, 박정아 선생님과 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혼혈아들은 대개 한국에서 계속 자라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다. 주한 미군주둔 50년동안 1, 2세대들 이루는 혼혈아는 대부분 해외로 입양되었고 3세대들 이루는 혼혈아는 지금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필벽재단이 입양알선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기지촌에서 25년 가량 매매춘 여성의 인권항상을 위해 노력해온 김연자 전도사는 "정부가 혼혈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아이들의 몸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피를 생각한다면 이들의 인권을 우리 모두가 나누어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한다. 또한 "정신대 문제이후 주둔한 외국 군인에게 장

기적이며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 "필리핀에서는 미군이 철수할 당시 보상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듯이 정신대 문제가 해결되면 곧 국내외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11월 21-27일까지 '참사랑 썬터, 돕기 안혜경 콘서트'가 소극장 라이브에서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여성문화예술기획은 "기지촌 여성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썬터가 겪고 있는 재정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비록 법 뿐이긴 하지만 윤락행위방지법이 존재하여 매매춘행위를 최소한 형식적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국이다. 하지만 기지촌에서는 한미행정협정도 언급된 바 없는 무법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춘은 우리의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또 혼혈아들은 자신이 누구의 이름과 성으로 불려지기를 원할까.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구원될 수 없고 구원되지않는 시간 25시에 남겨진 그들, 우리의 이웃으로 하기에 너무도 먼 현실인가!

(<인권하루소식> 최은아)

○ 행사 안내 ○

- 제4회 외국인등록법 국제심포지움
 - 전후50년과 외국인등록법 근본개정운동
 - 일시 : 11월 21-24일
 - 장소 : 서울 한강호텔(☎ 453-5131)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44-3717)/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외국인 인권선교위원회/일본 외등법문제 전국기독교 연합협의회등
- 주제강연
 - 21일 - 재일동포 인권의 과제와 전망(배종도, 민족차별과 싸우는 연합회의 회장) / 22일 - 전후처리와 새로운 한일관계(지명관, 한림대교수), 전후50년 일본교회의 과제(호다카마모리, 일본 외등법문제 전국기독교 연합회 사무국장)
- 병무청의 과거청산 합의불이행 규탄대회
 - 일시: 11월 19일(토) 11시
 - 장소: 병무청 앞
 - 주최: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전화 : 742-1589)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최태호이고 재부검에서 피하출혈, 타박상 발견

25일경 부검결과 나올 예정, 사망진 구타가능성 짙어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 이교에 대한 재부검이 지난 18일 오후1시부터 경북대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안동지청 변찬우 검사의 지휘하에 광정식 박사(경북대의대 법의학교실)의 집도로 이뤄졌다. 이날 재부검에는 교도소측 직원, 유족, 오창래(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씨 등이 입회하였다. <인권하루소식> 11월 18일자 참조.

이날 재부검에서 1차 부검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측두부 피하출혈과 가슴부분의 타박상 등이 새로이 발견되어 1차 부검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광 박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의사(편지자 주-목을 매어 죽음)이고, 주요해부소견에서는 '목에 있는 의흔(편지자 주-목 덴 자국) 29cm, 설골 골절, 전두부, 측두부, 오른쪽 가슴 등 모두 10군데 찰과상 및 좌상(편지자 주-피하출혈, 타박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요해부소견에서 직경 3.5cm 크기의 간뇌부 종양이 있음을 새로 발견하기도 하였다. 부검 결과는 오는 25일경 나올 예정이다.

한편 유족 중 이규정(최이교의 이조부)씨는 "재부

검 결과 몸 전체에서 타박상과 피하출혈이 발견된 만큼 이는 최 이교가 사망진에 구타당한 것이므로 구타자에 대한 수사와 지

휘감독소홀, 사인은폐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신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소하고 검사가 구형을 내리 이에 대한 이덕우 변호사의 의제기가 있었다. 이덕우변호사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자료집의 극히 일부분만을 확대해석해 객관성을 잃고 있다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학계에 의뢰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 판사는 "공안문제연구소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317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등 고용조건에 관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제 한국인노동자 24명이 낸 소송과 관련하여 "시급제는 월급제와 달리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별도의 주휴 및 월차 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한미행정협정 1백75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병무청, 대학원생경력양심수 군문제 해결 약속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 40여명은 19일 병무청 징집국장을 만나 지난 2월 합의한 병역문제를 22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병무청의 과거청산 합의 불이행 규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양군모에서 지적하고 있는 병무청의 '약속불이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시행령에 수정집단체해당시기규정(89.3.25-93.2.24)을 두고 있으나 이전 행위자들에게 대해서도 고려할 것, △대학원 학력을 가졌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에 대한 병역면제, △복적생의 경우 29세까지 해당될 수 있도록 할 것등이다. <인권하루소식> 11월 4일자 참조.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지난 18일 이화여대 인문대학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정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 비판이 있었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존파'사건의 제보자를 단독인터뷰했던 『시사저널』의 김당 기자는 범죄신고 기피율이 높은 이유는 시민의식의 부족

(21.8%)보다 제도 및 경찰관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등과 학생·시민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차병직 변호사(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집중심리제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은 강력범죄 혐의자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형을 확정하고 집행하여 대국민적 위화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즉 집중심리제도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용은 졸속심판의 위험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형을 비롯한 모든 형벌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형벌을 재범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쓸 것인가, 행위오보

가 되고, 매년 9명에서 15명

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고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대기중"이라고 밝혔다. 토론의 말미에 지존파 관련자 중 김기환씨를 예로 들어 사형집행에 관한 의견을 참석자들에게 물어 반대 42명, 찬성 14명, 기권 5명의 의견이 모아졌다.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4월 시작되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 17명의 두밀분교 학생들이 어머니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 여름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생겨 두밀분교운동회, 기금마련한마당등 두밀분교살리기 운동을 펼치는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1년 가까이 정식 학교 아닌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오면서 겪었던 두밀분교 주민, 학생들의 싸움은 농촌의 황폐화 문제와 농촌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2일 제7차 공판을 앞두고 93년 12월 '두밀분교 폐교결정'에서 이 문제를 일정별로 정리해본다(편집자 주).

- 93년
- 12월 10일, 두밀분교 폐교 결정 주민에게 통고
- 94년
- 1월 5일, 두밀리 주민 폐교반대 진정서 우송
- 2월21일, 두밀리 주민 1백여명 가평군 교육청에서 두밀분교폐교반대 집회.
- 2월23일, 두밀분교 신입생 학부모, 상색국교에서의 취학통지서 접수 거부
- 2월25일, 경기도 교육청 "두밀분교 폐교는 92년 2월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철회불가" 의사 통보
- 2월28일, 주민대표, 국회 조순형 교육위원장 면담
- 3월 2일, 상색국교 대신 두밀분교로 등교 시작
- 3월 4일, 가평교육청 두밀분교 교문봉쇄
- 3월 6일, 마을회관에서 임시수업시작
- 3월24일, 두밀리 주민대표 군교육청 방문, 폐교근거와 절차에 관한 자료 공개요구했으나 교육청 거절.
- 3월26일, 가평군 교육청 두밀분교 시설물 철거
- 4월 8일, 두밀리주민 1백여명 6시간동안 여의도 민자당사 앞 폐교철회 요구집회
- 4월12일, 서울고법에 두밀분교 폐교철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제기
- 5월13일, 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기각
- 7월22일,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발족
- 8월26일,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소송제기
- 8월31일,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청구소송 4차 공판, 조례무효확인 소송 병행심리 시작
- 10월20일, 두밀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열림
- 10월25일, 폐교의 부당성을 밝히는 조용환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가평교육』의 글을 재판부에 제출
- 11월22일, 두밀분교 폐교처분취소청구 소송 7차 공판 예정

◆ 행사 안내 ◆

- 작은 토론회-한국의 기초질서와 싱가포르형 질서문화
 - 일시 : 11월 22일(화) 오후4시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 발제 : 한국의 교통현실과 합리적 단속방법(김홍상, 명지대 교통공학파), 싱가포르 식 규제, 과연 한국에 타당한가(박원순 변호사)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 일시 : 11월 23일(수) 오후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발제 :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원철 변호사),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자보호법이 갖는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 주최 :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 일시 : 11월 24일(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발제 :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보사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안(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안됐다

국제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등 촉구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22일 발표하였다(특별보고서 2면 참조). 국제법률가협회는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은 위안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을 6개월안으로 개최하며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또 만약 일본정부가 위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문제에 해당하는 협약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하도록 추진"할것을 권고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특별보고서 조사자들은 "중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에서 10-20만 여성과 소녀들이 일본군대에 끌려가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으로 잔인하게 성적학대를 당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률가협회는 지난 93년 3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특별조사자로 우스티니아 돌고폴 교수(호주 필리스 대학교 법대)와 스테하 파란

제이부 변호사(안도 봄베이 고등법원)를 임명하였다. 지난 93년 4월 이 두 조사자는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등을 방문하여 희생자 40여명과 전직 일본군인 3명, 그리고 정부대표자

들, 비정부단체들, 법률가들, 학자, 기자들을 만나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는 국제법률가협회의 발표를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국제법률가협회의 발표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법률가협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회복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22일 오전 8시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위원장 김금림)는 회현동에 위치한 금호그룹 본사 앞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고소고발 취하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직원한테 떠밀려 구속자 가족인 송현주씨가 머리를 다쳐 현재 중대부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은 계속 회사직원과 대치하면서 남대문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피켓을 들고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지난 6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위원장 장영일)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금호(주)측은 업무방해와 폭행, 방화,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노동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였다. 또한 회사측은 조합원, 보증인, 추천인에게 총 3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이를 빌미로 40여명의 조합원들을 강제

사직시켰다. 구속자 가족 구영미, 반서연씨등 7명은 고소고발 취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강제사직자에 대한 원직복직, 고문폭행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박상용 회장과 직접 면담을 추진하는 등 25일까지 노동부, 민주당방 방문 농성을 계획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6월 파업당시 공권력 투입으로 417명이 연행되었으며 현재, 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39명이 구속되었다. 그중 20여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집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이중 장갑근, 정두희씨가 1년 6개월과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14명 조합원들은 가족들의 상경투쟁을 지지하는 단식농성 중이다.

◆ 공 판 안 내 ◆

- 11월 23일(수)
 - 김중백,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0분 311호 합의 21부
 - 이종린, 국가보안법위반 2시 30분 3121호 합의 21부
 - 김영옥, 국가보안법위반 4시 317호 8단독
 - 최종민, 국가보안법위반 11시 424호 9단독
 - 이영기의 1인, 국가보안법위반 2시 425호 합의 22부
 - 안창일의 1인, 국가보안법위반 2시 425호 합의 22부
- 11월 24일 (목)
 - 문영기,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7호 3단독
 - 김병욱, 국가보안법위반 4시 317호 3단독
 - 이경수 노동쟁의조정위반법 10시 421호 7단독
- 11월 25일 (금)
 - 김영호, 국가보안법 위반 10시 311호 합의 23부
 - 이정이, 국가보안법 위반 11시 311호 합의 23부
 - 백근화, 국가보안법 위반 10시 317호 1단독
 - 김명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10시 421호 8단독

○ 국제 인권 소식 ○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 창립워크샵 11월 28-30일, 타이 방산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역 정보센터」(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RC)는 아시아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타이 방산에서 11월 28-30일 창립 기념 워크샵(Founding Meeting)을 가진다.

ARRC는 이번 창립워크샵에서 아시아지역 인권 발전을 위해 채택한 전략 권고의 역할 평가, △지역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전략 채택, △ARRC의 해 비관적 재검토등을 통해 △방향성 채택 및 활동의 우선사항 논의, △정보 유통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 다음 2년(95-96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ARRC의 적절한 행정적 구조 채택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ARRC는 인권상황이 각기 다른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인권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체계가 필요함을 느껴 92년 3월 설립되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재창립되는 것이다.

◆ 오늘의 행사 ◆

- 정대협 창립4주년 수요시위(전화 365-4016)
 - 일시 : 11월 23일(수) 12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 일시 : 11월 23일(수) 오후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발제 : 입법청원요지 및 법안 설명(박연철 변호사),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자보호법이 갖는 의미(윤태범, 서울대 행정학과)
 - 주최 :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1. (생략) / 2. (생략) /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을 위반함 :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권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일본이 배상의무를 해결하고 있지않다. 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 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효를 이유로 삼아 일본정부는 책임에서 회피할 수 없다. 시효의 주장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가해자를 불처벌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도 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1. (a)(생략-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관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공개 : 편집자) (b)일본은 약6개월 이내에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고, 지체없이 대처해나갈 수 있는 행정적 포럼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아니면 적합한 법을 제정하여 현재 심리중인 소송을 속히 결말짓도록 해야 한다.
2. (일본이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의료혜택, 살만한 가옥제공등 고통배상을 위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 편집자)
3. 일본이 이 여성들에게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않을 경우 이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않은 나라에서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재판정을 최대한 속히 개설해야 한다. 비정부단체나 개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미리 법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보고 또한 이를 지켜야 한다.
4. 2와 3항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여성 개개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4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이 4만불은 권리에 분쟁에 대한 편견없이 순전히 임시조치로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이 여성들을 대표하는 비정부단체는 일본정부에 희생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5. 만일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현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 여성들을 대표하는 비정부단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듣기위해 유엔의 적절한 조직이나 전문적인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인 이 사건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협약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도록 속히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7. (연합군 회원국은 이 문제관련 소장자료의 공개 및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 편집자)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최태호 이교를 구타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라

최이교 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 이교의 아버지 최중구씨는 22일 최 이교 사망장 구타당했다며 구타에 참가한 안동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부검결과 나타난 좌측 머리의 출혈과 양쪽 정맥이, 양쪽 무릎과 상치, 가슴과 등의 멍자국 등은 구타의 흔적이 분명하다"며 "최 이교를 구타한 성명불상의 경비교도대원을 색출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또 "부검결과 최 이교의 사체에서 구타, 가

혹행위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에서는 구타행위자를 찾아내는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자살로 수사를 종결짓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이광협 안동교도소 보안과장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 이교 사망과 관련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안동교도소 최 이교 자살사건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문건에서 ▲85cm의 포승줄로 1백78cm 키의 최 이교가 1백57cm의 높이에 목을 매달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죽는 것이 가능한가, ▲교도소에서 맨 처음 자살에 사용된 포승의 길이가 85cm

로 발표했다가 검찰의 현장조사에서 1백10cm로 바뀐 경위는 무엇인가, ▲교도소에서는 최 이교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발견되

었다고 발표했지만 최 이교를 최초로 검안한 성소병원 의사 임호식은 군복차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등의 문을 제기하며, "구타, 가혹행위자를 밝혀내는 일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 이교는 지난 8월 11일 임대하여 10월 15일 안동교도소 경비교도대로 배속된 지 16일 만에 사망했다.

전모공개, 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국제법률가협회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특별보고서 이후 정진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정진대 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는 23일 로 4주년을 맞이하여 제1백44차 수요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대 할머니, 여성단체 회원, 종교인, 취재진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대협은 성명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범죄의 전모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국제법적 배상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군위안부 해결없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집회는 여성민우회 풍물패 단비와 노래마음이 참석하여 한결 힘차면서도 숙연한 분위기로 어우러졌다. 원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전경의 저지로 30m 떨어진 곳

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 경찰청은 "일본대사관이 요구하여 전경을 배치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교협인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의정인등록법 심포지움에 참석하러 한국에 온 일본기독교협의회 관계자 야와라 아끼히코(재일의국민 인권위원)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연대의 기초를 다졌다.

집회후 윤순녀 정대협 공동대표는 4년동안 정대협 활동에 대해 "민족과 여성의 한으로 잊혀진 정진대 문제가 이제는 여성, 인권 운동으로 승화되어 전세계적인 인류의 문제로 인식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게 하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 정대협 총무인 이미경씨는 "정진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50여년전 인권침해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점과 여성, 인권, 민족운동이 밀받침되어 정대협 활동의 성과가 쌓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انگي부 프락치에서 양심선언까지』

-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전모 비디오 테이프 판매중

안기부 프락치 배안오씨 양심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안기부 수사관들의 얼굴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개당 6,000원, 5개 이상 구입시 개당 5,000원씩
구입문의처: 전국연합(747-4364, 5)

실가로 판매합니다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리비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내부리비 고발지원센터'(소장 박연철)에서 마련한 내부리비 제보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양심선언자 가족, 윤석양 전 이병동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진관 교수(성공회대학교 신학)의 사회와 박연철 변호사(내부리비고발지원센터 소장), 윤대범(서울대 강사)씨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연철 소장은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청원요지를 밝히고, "이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리비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대범씨는 "한국의 부패구조와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이 갖는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부패현상은 한두사람이 개인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여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체제적 부패'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부

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어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2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서 위원장 특별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을 인상해 대해 반대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운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공무원의 수혜와 부담에서 찾은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니다"라며 ▲연금기금운

두사람이 개인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입하여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체제적 부패'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부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은 조직의 민주화와 정당한 고발을 활성화하고 소수에 의한 사정이 아닌 양심있는 다수에 의한 상시적인 통제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운용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금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게 보장한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의 폐지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로부터 독립, 연금가입자 대표의 참여 보장 ▲연금운영의 내용 공개, 공개적인 감사 ▲정부가 빌어쓴 연금기금의 상환, 기금손실액 보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의 개악에 반대하는 「전국교사 서명운동」의 전개 ▲한국교총의 동참과 연대투쟁 계안 △교원, 공무원노동조합의회를 비롯하여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도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문제해결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황영하 장관의 발표를 통해 공무원 연금의 비용부담률을 현재 5.5%에서 최고 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정자금 예탁수익을 현실화 등으로 기금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혀 교사

와 공무원들로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개악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부실운영에 기인하는 것을 공무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30개 환경, 사회단체 반핵운동본부 결성

환경운동연합, 전국연합, 핵발전소, 핵폐기장 건설반대 광주·전남대책회의 등 30여 개 환경·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반핵운동본부」는 22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속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반핵운동본부는 결성선언문에서 "정부가 핵발전소 추가건설계획을 강행한다면 주민과 연대해 전면적으로 대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정구선 정구선씨를 상임의장으로, 최열씨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광주·전남연합 박현주씨 긴급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 박현주(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씨는 수배중이던 남측련의장 양동훈씨(23)에게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송용차를 빌려주어 도피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불법시위 등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행사 안내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 1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발제 :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변질식, 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능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김삼석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홍용씨 김씨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지난 10월 29일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김삼석, 김은주씨 남매의 간첩단 조작에 참가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백홍용(28, 일명 배인오)씨는 "김삼석, 은주씨의 무죄입증을 위해 들어올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24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낸 '김삼석, 은주씨와 가족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김삼석, 은주씨의 무죄(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안기부에 잡혀가는 일이 생긴다해도 (한국에) 들어올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김삼석, 은주씨의 간첩조작행위와 안기부의 비인간적인 면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하던 김삼석씨에 비해, 저는 안기부 비밀안가에 앉아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김삼석씨와 은주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진술서를 썼다"고 반성했다. 또 백씨는 "안기부는 언론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해 폭로기사를 못내게 하고, 나에 대해 온갖 거짓선전들을 해대고 있다"며, 그 예로 ▲백씨가 자발적으로 찾아갔고 ▲김씨남매는 백씨 제보로 구속했으며 ▲94년초에 백씨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백씨는 해외에서 양심선언을 한 이유로 안기부는

▲비밀을 폭로할 경우에 대비,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쓰게하고 월급주는 장면을 사진촬영을 하며 ▲배신할 경우 죽게 된다는 위협때문이었다고 밝혔다(2면에 편지전문 게재).

회징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자가족, 연행돼

22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금호타이어구속자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금림)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의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와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24일 금호그룹 본사 아시아 빌딩 앞에서 박상룡 회장과 면담을 신청, 거부당하고 남대문 경찰서로 반서연, 구영미씨 등 5명이 연행당했다. 구속자가족대책위는 23일에도 박희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징문 안에 갖혀 풀려나오기도 했다. 회사측은 모든 출입문을 막고 유리파손의 책임을 가족에게 넘기면서 기물파손으로 고소하겠다

고 위협하고 있다. 한편, 반서연(김영만씨 처)씨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성명불상)을 불법체포, 감금혐의로 9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반씨는 고발서에서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환,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없이 여관으로 불법연행되어 팬티만 입혀놓은 상태에서 목덜미, 어깨등을 구타당했고 담배불지점을 당했으며 송곳으로 찔렸다"고 말했다. 또한 반씨는 지난 8월 12일에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24시간 수감체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국제사면위

국제사면위원회는 23일 자신들이 양심수로 규정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61)씨가 "사형을 구형받은 지난 17일 이후 24시간 계속 수감을 차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런 형벌은 새로운 자의적인 구금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위는 안기부가 안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안 깨우고 자백을 강요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하였다.

김삼석, 은주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백홍용(일명 배인오)-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 중 명백하게 틀린 부분은 그대로 쓰는 대신 <안에 수정을 하였고 뜻이 통하는 곳은 그대로 가감없이 실었다(편집자).

저의 죄가 너무 무거워 무슨 말로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몹시 싸늘해 졌습니다. 감옥속에는 한겨울 풍풍 일어 불은 날씨지요. 간첩누명을 쓰고 감옥속 추위의 몸 움추리며 고생하실 김삼석씨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와서 편안히 있는 나의 육체를 확대하고 싶어 지곤 합니다.

안기부원 불러주는 대로 간첩조작 진술서 써 내려가

아침에 멍한 상태로 눈을 뜹니다. 정신발작 증세까지 일으키며 갈등하고도 저는 결국 안기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안기부 지하에서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하던 김삼석씨의<에> 비해, 저는 안기부 비밀안가 소파에 앉아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김삼석씨와 은주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진술서를 써내려 갔었습니다. 안기부의 지시만 내리면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 작하고 양심적인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들을 배반하며 간첩으로 조작하는 작업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죄가 내 온몸에 흐르고 있었습니. 그러나 내 몸의 죄를 모두 밝히고 나니, 몸에 힘이 빠져서 아침에 멍한 상태로 눈을 뜨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고 깨끗한 정신이 나의 온몸으로 들어와 힘을 내리라고 믿습니다. 김삼석씨와 은주씨가 간첩누명이 벗어져 무죄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내겠습니다.

안기부, 간첩조작사건 '보도'에 압력 지금 안기부에서는 저의 양심선언을 빗바라게 하기 위해 보수언론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해 저의 폭로기사를 못내게 하고, 저의 <에> 대한 온갖<갓> 거짓선전들을 해대며 안개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시찰겸 여행 나오게 된 것도 저 혼자서 한 일이라고 안기부는 말합니다. 그러나 안기부에서

일한 사람들, 특히 안기부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기부의 승인없이 절대 해외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국내에서 원천봉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기부는 제가 90년도에 제발로 협조하겠다고 찾아갔고 김삼석, 은주씨를 제가 제보해서 구속했다고 하며, 을 초에 안기부와 저와의 관계는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러한 속들여다 보이는 유치한 안기부의 거짓말에 여러분들께서는 헛갈리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안기부원들도 자랑하듯이 "안기부는 살아 숨쉬는 인간만 만들어 내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만들어 낸다"는 조적입니다. 그러므로 안기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안기부, 협력자 비밀관리 철저

제가 국내에서 안기부의 비인간적인 면들을 폭로하지 못하고 해외에 나와서 폭로한 점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양심선언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안기부에서 지금까지 발표하거나 담당<담당>한 사건들 중에 조작의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폭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안기부에서 일하는 것을 본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해주며 자신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사상교육을 시킵니다. 둘째, 안기부의 비밀을 폭로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을 자신이 자발해서 한 것처럼 직접 진술서를 쓰게(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써야 됨)하며, 자신이 자술서 쓰는 모습과 월급 주는 모습을 자신촬영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용도 모르는 서명서에 서명하게 하고(2년간 본인이 서명한 것은 30여종이 있음) 그 서류를 보관해 놓습니다. 세번째로 안기부를 배신할 경우 쥐도새도 모르게 죽게 된다는 미소의 위협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국내에서 안기부의 비인간적인 면들을 폭로했을 경우 현재처럼 양심적인 진보언

론들은 저의 말을 믿고 보도하겠지만 보수언론들은 예전에도 해 왔듯이 보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씨남매 무죄입증 위해 입국 각오 또한 저는 언젠가는 안기부 손에 잡혀 국가모독죄와 공갈죄 같은 것들을 적용시켜서 수많은 범죄자의 한사람 같이 만들어 구속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들을 보수언론들이 앞 다투며 떠들게 될 것입니다(그렇지만 김삼석, 은주씨의 무죄를 위해 제가 국내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안기부에 잡혀가는 일이 생긴다해도 들어오려면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을 다살고 안기부의<에> 의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배신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게 안기부의 법입니다. 을 초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장윤봉)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안기부원을 만나고 난 후 3일후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희 남누리영상 회원들과 그 친구가 있는 영안실에 갔었습니다. 의사 말에 의하면 두세번 차에 받쳤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어떤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친구는 결혼한지 3년이 지나 임신 5개월인 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죽는다는 것이 두려워 독일까지 와서 안기부를 폭로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폭로하겠다고 결정한 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나오게 되어 이 기회를 이용하면 더 많은 장점으로 안기부를 폭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김삼석, 은주씨의 간첩조작 행위와 안기부의 비인간적인 면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여 계속적인 효력을 쟁취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안기부는 다른 프락치들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으로 안기부의 간첩조작 과정을 폭로한 저의 양심선언을 온갖<갓>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는 짓<짓>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김삼석씨와 은주씨의 무죄를 위하여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양심선언 과정에서 저의 사생활까지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사죄 올립니다. 1994년 11월 18일 백홍용 올림.

◎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일시 : 11월 25일(금) 12시 /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민주노동총선추진위등

『안기부 프락치에서 양심선언까지』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전모 비디오 테이프 판매중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씨 양심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안기부 수사관들의 얼굴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개당 6,000원, 5개 이상 구입시 개당 5,000원씩
 구입문의처: 전국연합(747-4364,5)
 살가로 판매합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능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감옥에 양심수가 묶여 있습니다

민가협, 11. 25~12. 9 양심수 거울나기 거리 캠페인

양심수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심수 석방운동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가 「민화회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 주최로 마련된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 앞서 민가협은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신촌 그랜드 백화점 앞에서 매일 저녁 7-8시 양심수 거울나기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신공안정국으로 구속된 청소년단체 '샘', '노민문연', '구국전위', '관련자 가족', '전해투', '전기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캠페인은 겨울철 고통받는 양심수를 기억하기 위해 양심수와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낭독, 함께 노래부르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캠페인 기간중 매주 토요일마다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회를 벌인다 (전화 763-2606)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강영화)

94년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지난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 상담소) 주최로 심포지움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이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최 소장은 전문상담인력의 확보와 재정, 현재 실험적인 여성중심 상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국가행정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 들어 난 성범죄사건이 단순한 성충동이 아닌 권력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혼 가정이 야기한 문제로 부각돼 다시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 경향을 띠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잘못된 강간통념 타파와 상대적 가해자인 남성을 교육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성의 힘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성폭력관련 정책의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에서 이봉화(정무제2 장관실)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강간 범죄율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보다 높으며, 강도강간 형태로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폭력관련 종합서비스 체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상담창구 강화와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성교육 실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정책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3년 12월에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발효된 '성폭력규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실태와 야기되는 법적문제를 다룬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이 최저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조훼손이라는 가벼운 이유로 옥살이를 해야 하는 가해자를 동정해서 집행유예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인데도 가해자의 범죄행위 자체보다 앞서 피해자의 전력으로 그 권한 자격을 심사하는 조사상의 이중강간을 피해자에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서도 정조의 노력을 한 여성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성폭력범죄의 관점은 피해자의 대응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요된 모든 성폭력은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보았

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된 조사장소와 대리인 제도 도입 ▲재범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성폭력 교화원을 설치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출소되거나 집행유예일 경우 일정 기간을 보호관찰로 두어 성폭력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가 다른 사회문제보다도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지면에 선정적인 단순 사실 보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문경란(중앙일보)기자가 언론의 성차별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여성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 활동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하고 여성들의 의사표명을 힘있게 전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심포지움을 보면서 성폭력이 노동환경권 및 약자의 인권침해라는 데서 여성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인권, 노동, 환경 등의 운동 단체들은 물론 많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각계와 연대해 목소리를 내출수 있으면 좀 더 깊은 이해와 폭넓은 실천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남은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일시 : 11월 28일(월) 오전 9:30~오후 3:00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

□목적 : '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국의 변호인단이 모여,

- 1)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 2)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배상액수 및 근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
- 3)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전략 모색
- 4)한·일 양국과 국외에 '위안부' 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에 대해 여론화한다.

□일정

- 발표1:PCA의 운동적의미(지은희 정대협PCA위원장, 10:00)
- 발표2:일본에서의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 및 PCA의 유용성(아이타니 변호사, 10:40)
- 발표3:한일협정과 PCA(배금자 변호사, 11:20)
- 발표4:유엔에서의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 및 PCA의 유용성(도즈카 변호사, 13:00)
- 발표5:개인배상의 내용(박원순 변호사, 13:40)
- 발표6:일본에서의 지원활동에 대하여(이시카와 이즈코, 14:20)
- 발표7:일본정부의 중재수락에 관한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오자키 준리 변호사, 14:40)
- 논평:김원웅의원, 외무부정신대문제 담당자(15:00-15:40)
- 문의처 : 정대협(전화 365-4016)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UN자문 기관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회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조사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계등, 정대협)와 국제중재재판소(PCA) 한일 변호인단은 2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첫 세미나를 갖고 중군위안부문제를 PCA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변호인단은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있어야 하며 지금은 국제법률가협회(ICJ) 권고안 대로 1인당 4만불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 '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육전법규관례에 관한 조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등을 위반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해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문을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위안부의 권은 한일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에 따른 '불처벌'의 배상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PCA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일본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면서 "위안부문제를 PCA로 가져가기 위해선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치적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여론이 PCA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은희(정대협 PCA 특별위원장)씨는 'PCA의 운동적 의미와 정대협의 향후 계획'의 발표에서 지난 4년간 정대협등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고 규정지었다. 이씨는 PCA 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실천을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참니다

클릭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참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즈카 에츠로변호사는 ICJ 최종보고서의 권고처럼 일본에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공정한 제3자인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해 신속하고 결정적이며 구속력있는 결정만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타니 구니오 변호사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기승인도, 재판도 불가능하지만 PCA에서 ICJ의 보고를 활용하여 법적 승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개인의 피해인정문제에 있어 최대문제는 일본정부의 동의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변호인단 발족과 같은 날인 9월15일 발족한 '국제중재재판소의 성공과 개인배상의 실현을 위한 연례회의'의 이시카와 이즈코씨는 "일본 정부가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정부가 중재재판에 합의해 국제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실현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연례회의는 '여성과 인권'등 40여개 단체와 3백여명의 개인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하순 무라야마 내각의 '청소년교류센터'안에 반대하며 철화와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긴급 서명활동을 벌여 1만여명의 서명을 수상에게 제출했다. 또한 10월25일 2차 집회후 12월 17일 3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변호인단과 함께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간첩혐의 이화춘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지난 8월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 사건)씨에 대한 첫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매일교포인 숙부 이좌영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 운동권 유인물등을 인쇄하여 반국가활동을 하지 않았는가"는 검찰측의 질문에 이씨는 "숙부를 만나 생활비를 받은 것은

90년이고, 인쇄소가 아닌 복사가게를 인수한 것은 89년"이라며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복사가게를 인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공작금을 가족들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가"고 되물었다.

또한 검찰은 간첩행위 증거로 이씨가 쓴 보고서를 예로 들었으나 이씨는 "보고서를 쓴 적도 없으며 검찰이 보고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은 한겨레 신문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안기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백홍용씨가 검상서, 김은주씨 남매 간첩조작에 참가한 사실을 밝히는 등 안기부가 공공연하게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소식제공 천주교인권위).

내란죄, 홍익범죄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

법(안)에는 내란죄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홍익범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국가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대법원은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공 판 안 내 ◆

- 11월 29일(화)
 - 정원현,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7호, 1단독
 - 강순정등 3명,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8호, 합의25부
 - 이상철,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 안영민등 2명(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2시, 318호, 합의25부
 - 김형욱,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2시, 418호, 항소4부
- 11월 30일(수)
 - 곽현용, 국가보안법위반, 10시, 424호, 9단독
 - 최영준(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1호, 합의21부
 - 정화려등2명(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1호, 합의21부
 -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 12월 1일(목)
 - 이종린,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1호, 합의21부
 - 최동기, 국가보안법위반, 3시, 317호, 3단독
 - 홍중희(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 류낙진(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 김명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10시, 321호, 5단독, 선고
 - 안성민,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21호, 5단독, 선고
 - 송경숙, 국가보안법위반, 10시, 421호, 7단독, 선고
 - 배영미, 국가보안법위반, 10시, 421호, 7단독, 선고
 - 이경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10시, 421호, 7단독
 - 이병석, 국가보안법위반, 10시, 424호, 선고, 10단독
 - 김성용, 국가보안법위반, 10시, 425호, 선고, 4단독
- 12월 2일(금)
 - 고영국(청소년단체 썸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2시, 424호, 10단독
 - 박성우, 국가보안법위반, 10시, 418호, 8단독, 선고
 - 강계우,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1호, 합의23부
 - 이영숙, 국가보안법위반, 10:30, 321호, 6단독, 선고
 - 양운모, 노동쟁의조정법위반, 10:30, 321호, 6단독, 선고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궁금하십니까?

『<인권하루소식> 합본호』를 찾아보십시오.

94년 2월 5일(101호)부터 94년 7월 7일(200호)까지는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로, 93년 8월 4일(준비1호)부터 94년 2월 4일(100호)까지는 『<인권하루소식> 합본1호』로 나와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호』에는 누구나 쉽게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주제별, 사건별 색인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합본2호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합본1호에는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소장의 '문민' 정권 1년의 인권이 머리글로 실려 볼거리를 더해 줍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
합본1호·2호를 함께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바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요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세계화'에 던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유엔 자결권인정 결의안은 통과, 행동은...비슷한 경험있는 한국은 어떻게?

자카르타 APEC정상회담에서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국제문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시점과 맞물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11월 30일(수)부터 12월 6일(화)까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로케 로드리게스(Roque Rodrigues, 45세)씨를 초청한다.

인권협은 초청장에서 "동티모르의 인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동티모르의 인권개선과 독립을 위해 한국의 인권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초청의의를 밝혔다. 또한 인권협은 "동티모르 민중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생생한 투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국제화, 세계화의 길 이 무엇인가를 되새길 동

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씨는 인권협 주최로 열리는 12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운동-현재와 미래"의 제목으로 대중강연회, 2일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동티모르 인권연대 집회, 3일 동티모르의 인권과 독립, 국제연대, 한국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워크샵에 참가하여 동티모르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여만 명이 기사, 학술등으로 습진 사실등을 사실을 증언하고, 동티모르의 인권보장과 독립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협은 12월 2일 여의도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동티모르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인권단체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직접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로드리게스씨를 대가로 초청하여 2일에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연회, 3일에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인권협은 "과거 미국과 일본의 문제로 시위를 한적이었지만 외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내인권단체가 직접 집회를 하는 것은 국내 인권운동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는 지난

93년 12월 아무드 알카티리(Amude Alkatiri)씨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상황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리게스씨의 이번 방한은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세계화'로 재정리한 계기가 되었던 APEC기간 동안 동티모르의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미 대사관에서 농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동티모르의 독립문제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로케 로드리게스씨는 75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공하기 직전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의 명령을 받고 인도네시아에 대항하는 외교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티모르를 탈출, 20년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는 현재 망명정부인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의 앙골라 대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 인권연대 행사일정

지역	제목	일시	시간	장소	강사	내용
서울	기자회견	12월1일	오후1시30분	전국연합 사무실	로드리게스 참석	동티모르 인권탄압 실태/94 자카르타 APEC회의 이후 동티모르 독립운동 방향/한국정부에 대한 요구
	강연회	12월1일	오후7시-9:30	향린교회	로드리게스	비디오상영/동티모르 인권과 독립운동-현재와 미래
	인권연대 시위	12월2일	오전11시-12시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인도네시아 대사에 항의서한 전달, 가두서명, 피켓시위
대구	워크샵	12월3일	오후5시-8시	참여연대 회의실	로드리게스 서준식 오완호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 국제연대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 한국의 역할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캠페인 소개
	강연회	12월2일	오후7시-9시	가톨릭근로자회관	로드리게스	비디오상영 및 동티모르 인권상황에 관한 강연
대구	기자회견	12월3일	오전9시30분	엠네스티 한국지부	로드리게스 참석	동티모르와 아시아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국제적 연대호소

AI보고서 허가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났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한국정부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허가도 없이 복사, 배포해 해당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부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허가도 없이 복사, 배포해 해당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국제사면위의 허가없이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이 보고서를 즉각 회수, 보관본의 파괴, 사면위의 서면 허가없이 사면위 문서를 복사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등을 요구했다.

사면위는 29일 "독립적이고 공평한 조직인 사면위는 정부에 의해 우리의 보고서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일로 공평성을 추구하는 사면위의 명성이 해를 입을 가능성을 특별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사면위는 또 통일원과 정부출판물간행소에서 제작된 사면위 보고서를 지난 8월에 입수했다고 밝힌 후 한국정부가 "서면으로 복사하지 않을 것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면위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법무연구』 발간

법무연수원이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과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개선편안/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소년감별소 기능활성화를 위한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의 발전방향과 금후과제(문의 0331-281-3140~4)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29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와 반론권'이란 주제로 94정기세미나를 진행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진석(한국의대 신방과) 교수가 '언론과 반론권', 강경근(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반론권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한

명희)는 11월30-12월2일 저녁 7시30분-9시에 여성노동자회 강당에서 제9기 여성교양강좌를 갖는다. 구성에(성교육전문가)씨 강의로 '일그러진 성, 새로 보는 성' '성에 대한 모든 것' 'X세대의 사랑만들기' 등 3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1강좌 2천원, 3강좌 5천원(전화 867-0516).

여성법정, ARRC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소장 서준식)의 김은영씨와 국내에서 인권연수중인 김준희씨가 11월 28-30일과 12월 1-2일에 태국에서 열리는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정보센터'(ARRC) 재창립 워크샵과 '아시아여성법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7일 출국했다.

ARRC워크샵은 태국의 방산에서 인권교육의 역할 및 전략수립, 앞으로의 활동방향등을 논의하고, 아시아여성법정(Asia Women's Tribunal)은 법과 발전에 관한 아태지역 여성포럼(APWLD) 주최로 방콕 출라롱콘대학에서 열리며 여성의 권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고, 개발과정에서 여성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을 주요 관심사로 한다.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궁금하십니까?

『<인권하루소식> 합본호』를 찾아보십시오.

94년 2월 5일(101호)부터 94년 7월 7일(200호)까지는 『<인권하루소식> 합본2호』로, 93년 8월 4일(준비1호)부터 94년 2월 4일(100호)까지는 『<인권하루소식> 합본1호』로 나와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호』에는 누구나 쉽게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주제별, 사건별 색인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합본2호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오재식 선생님의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합본1호에는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소장의 '문민' 정권 1년의 인권이 머리글로 실려 볼거리를 더해 줍니다.

합본2호 가격은 1만원!
합본1호·2호를 함께 구입하실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바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우편요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끔찍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 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계좌번호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인권하루소식

94년 12월

(제298호 - 제300호)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의결, 회기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권등 유보

정부는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을 오는 6일 국회의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 고문을 자행한 특정국가의 위반사항에 대해 국가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도 유보하기로 했다.

수감중인 류낙진(66)씨는 무기징역을, 이영기(27)·홍중희(37)·박태군(32)씨는 각각 10년을, 유성찬(29)씨는 7년을, 안영민(25, 안재구씨 아들)씨는 징역5년을 구형받았었다.

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횡포가 근절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11월 17일 사형구형을 받은 후 곧바로 수감이 채워져 식사, 세면, 운동 등에 제약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영등포교도소는 「규정」에 의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또 다른 교도소나 다른 사건에서 안씨와 같은 사형 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영등포교도소가 「규정」을 빌미로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안재구씨 무기징역 선고

반국가단체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는 30일 “구국전위가 반국가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등 검사의 논고를 대부분 인정하며 이와같이 선고를 했다. 이와함께 공작금으로 받은 2억7천6백여만 원 을 추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국전위 결성축하문이 조작되었음’ 복한 조선노

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기구형)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공작금으로 받은 1천5백만 원을 추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최영준(4년구형)·김진국(10년구형)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구국전위 사건으로

안재구씨 가족, 24시간 수감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30일 1심에서 무기를 선고받은 안재구(61)씨의 가족들은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안씨가 24시간 수감을 찬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인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초청 기자회견

- 일시 : 1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사무실
- 내용 : 동티모르 인권탄압 실태/94 자카르타 APEC 회의 이후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방향/한국정부에 대한 요구등
-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운동-현재와 미래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초청 강연회
- 일시 : 12월 1일(목) 오후 7시-9시 30분
- 장소 : 향린교회(명동 중앙극장 뒤)
- 내용 : 비디오 상영(“Cold Blood”)/강연
- 강사 : 로케 로드리게스(동티모르 독립운동가)
-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95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와 한국사회

-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 워크샵
- 일시 : 12월 2일(금) 오후 1시 30분-3일(토) 12시 30분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 일정 : 제1, 2부(12월 1일)/제3부(12월 2일)
- 내용 : 제1부-WSSD(사회개발 정상회담)와 한국사회
 발제1:WSSD의 개최배경과 논의과정(곽창규)
 발제2:SHD(지속가능한 인간적 개발)와 한국사회개발 모델의 비판적 검토(김대환)
 발제3: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의 방향(이시재)
 발제4:SHD와 한국사회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안병영)
 제2부-WSSD와 한국의 국제화
 발제5:WSSD와 국제경제질서의 개편방향(정갑영)
 발제6:한국민간사회단체의 관점에서 본 국제화/세계화(유재현)
 제3부-WSSD와 민간사회단체의 역할
 발제7:21세기 세계와 한국민간사회단체의 도전(박상중)

□아동학대 예방대책 세미나

- 일시 : 12월 2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내용 : 아동학대의 현황 및 대책(이영희)
 아동학대의 범위(안동현)
 아동보호서비스의 도입에 관한 연구(윤혜미)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에 관한 연구(이배근)
- 주최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인권하루소식」 11월분 총목차(276호-297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1/1	276	1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배틀린서 양심선언, 김삼석·김은주 사건 조작 확인돼/「샘」, 「노민문연」 석방기원의 밤 열려
		2,3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256호-275호)
11/2	277	1	조작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 발족/「국보법·노동악법 철폐」 서울 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이창복씨 첫공판, 판사가 일방적 연기
		2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씨 양심선언 자료요약-김삼석남매 간첩조작의 진상
11/3	278	1	한미행정협정개정 투쟁 적극적 전개, 윤금씨 2주기 추모제, 운동본부 1주년/주한미군 윤금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민정권회원 7명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2	국제인권소식-네팔, 국제선거감시단원 모집중/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추모집회/
11/4	279	1	병무청의 약속파기-양군도 대학원생 30여명 징집위기/민가협 57차 목요집회/유가협,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
		2	안동교도소 최태호이경 사망사건-유족들 타살 의혹 제기, 정수리에 피멍, 정경이에 구타흔적/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11/5	280	1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상 사건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출범
		2	단체탐방 33 / 서울지역공부방연합, 우리가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자기 사랑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곳
11/8	281	1	인도 보팔 가스누출참사 10주년 기념행사 진행
		2	경찰, 대학구내에서 공포 썩, 한총련 조통위원장 연행/기소권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경실련 토론회/전국연합등, 부패무능정권 규탄집회/홍사단, 학생의 날 기념식/동두천시민회, 미군상대 단식농성, 거리서명
11/9	282	1	“한국인 세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2	12·12 기소유예는 검찰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제 확대추구, 대한변협 12·12 사건토론회/민우회,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 발간/동일여고 졸업생 피켓시위/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국민적 요구 담아낼 수 있어야
11/10	283	1	배인오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양심선언 현지조사 결과발표
		2	국제인권소식-엠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아시아여성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도어민 무기한 파업돌입, 외국어선 조업금지 요구//성희롱, 권력에 의한 것,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일수록 성희롱 심해, 남녀고용평등 토론회
11/11	284	1	백홍용씨 양심선언을 보는 각계의 의견-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작성해야, 조작의혹 간첩사건 재조사 필요
		2	동두천시, 미군지프피해자 배상금 지급위해 노력하기로/민가협·전국연합등 안기부앞 항의집회-간첩사건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3	백홍용씨가 이덕우, 이기욱 변호사에게 쓴 자술서
11/12	285	1	“교교에 주사파침투” 경찰발표 배긴 동아일보, 「샘」회원 강천규, 민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공판/민주노총건설 위지를 결집할 전국노동자대회
		2	반성문 안 쓴다고 퇴학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손봉원 현대정공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이유로 구속/12월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등 12·12 기소조치 촉구
		3	단체탐방 34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좇아 민주화·인권의 실현을 위해 나선 신부님

「인권하루소식」 11월분 총목차(276호-297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11/15	286	1	한국민간단체, 동티모르 인권문제등 APEC회담에 대한 입장표명/파출소 비리폭로경관 파면처분 지나치다, 총무처 소청심사위/민주노총준비위 발족, 13일 노동자대회에서
		2	자료-백홍용씨 양심선언 배틀린 현지조사보고서(요약)와 독일 현지신문 보도
11/16	287	1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인권위원회 설립·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참여연대등 APEC에 요구/「샘」사건 김용우씨 2차공판
		2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김동한)/국제인권소식-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성명서(요약)
11/17	288	1	김청동사건, 신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성 짙다, 피의자들 김청동결성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12.12 기소위해 시민행동 조직결의, 12.12까지 매일 대검앞 항의집회
		2	최태호이교 의문사 의혹 증폭, 대책위결성, 항의집회/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KNCC인권위 구국전위 안개구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최태호이교 대책위 출범, 재부검요구 관철
11/18	289	1	부산신씨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사건 진상규명 대책위/국제엠네스티-전 남한 안기부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석방 재요청
11/19	290	1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말라, 함주명씨등 ‘고문범죄자 처벌’ 제창고/주민참여가 지자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체와 장애인교육’ 토론회/윤석양 출소환영회 열려
		2	단체탐방 35 / 참사랑 센터-우리는 매춘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최태호이교 재부검에서 피하출혈, 타박상 발견, 25일경 부검결과 나올예정, 사망진 구타가능성 짙어/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4년구형/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문제 해결약속
11/22	291	1	집중심리 오용, 지존과·사법정의토론회/사건으로 되집어 본 두말분교 폐교철회 운동
		2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안됐다, 국제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등 촉구/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11/23	292	1	국제인권소식-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 창립워크샵, 11월28-30일, 타이 방산/95년 ‘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 1월9일-2월3일, 타이 방콕/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요약)
		2	최태호이교를 구타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라, 최이교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사살로 사건은 폐/전도모개·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정태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11/24	293	1	양심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전교조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30개 환경·사회단체 반핵운동본부 결성/광주·전남연합 박현주씨 긴급구속
		2	김삼석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가오 되어있다, 백홍용씨, 김씨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희망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자 가족, 연행돼/24시간 수감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국제사면위
11/25	294	1	백홍용씨가 ‘김삼석, 은주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94년 11월 18일자
		2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대학원학력자, 89년 3월이전 토목자도 징집면제
11/26	295	1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소비자, “국민제소권 박탈, 의사 형사책임 면제”, 의사, “형사소추에 신중, 난동행위에 가중처벌”/원직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 원직직업병 판정 3백62명,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
		2	감옥에 양심수가 묶여 있습니다-민가협, 11.25.-12.9. 양심수 겨울나기 거리캠페인/독자투고-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강영화)
		3	일본군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의료비로 4만불 적당
11/29	296	1	간첩혐의 이화춘씨 법정서 사건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내란죄, 흉악범죄등에 사형제도 존속
		2	‘세계화’에 단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유엔 자결권인정 결의안은 통과, 행동은……미수한 경험있는 한국은 어떻게?/
11/30	297	1	AI보고서 허가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냈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법무연수원 「법무연구」 발간/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여성법정, ARRC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2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동티모르 독립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게 인권단체 압력 필요

식민지경험 나는 한국민간단체의 연대 중요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 초청으로 한국에 온 로케 로드리게스(45)씨는 1일 전국연합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가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로드리게스씨는 "우리 동티모르 민중은 독립운동가 사나나 구스마오의 즉각적인 석방과 유엔이 결의한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자결권을 주민투표로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한국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인권의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힘으로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한국인권단체가 많은 압력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에게 식민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고 군사독재를 물리치는 민주화 투쟁이 성공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에는 한국과 같이 식민지 경험, 군사독재 체제, 개발과 인권침해 문제를 비슷하게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는 활동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연대해야 한다. 최근 아시아 대륙의 민주화 경향은 역사적 현실이고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도 민주화될 것이며 인도네시아내에도 조금씩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세력이

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화춘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일본에 있는 「이화춘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화춘씨의 간첩혐의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1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낸 11월 28일자 결의문에 이화춘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씨가 숙부를 만나러 일본에 온 것을 기회로 삼아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마구 단정하고 이화춘씨와 연결시켜 간첩으로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이씨에게 생환비를 준 이좌영씨는 "74년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형님과 동생이 투옥되었고, 특히 형님은 가혹한 옥살이로 인한 병 때문에 출옥 후 세상을 떠났다"며, "이좌영씨는 세상을 떠난 형님의 아들은 이화춘씨가 생활이 곤궁해 도와주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화춘씨는 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일본의 한 통련등에서 공작금을 받아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우리청년회」(회장 강혁) 회원 6명이 1일 새벽 3시

를 전후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구속장서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부, 대전, 부산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1백20여명에 이른다. 소식지로는 「청년공동체」(57호까지 발간)가 있고, 전혜두, 전기협,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연행자 명단 강혁(29), 김준오(29, 사무장), 신규용(25, 전 연대사업부장), 김현수(26, 교육부장), 이승우(28, 편집부장), 민병재(26, 전 서부지부장)

최태호이교 구타자 처벌 천주교인권위등 고발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와 「최태호이교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문, 이천우)는 지난 10월 31일 시체로 발견된 안동교도소 최태호이교가 사망전에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다며 구타행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안동교도소는 "최 이교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단순자살이라고 보기에 너무 많은 의혹이 있다"고, "부검결과 구타의 흔적이 일곱 군데나 발견됐다"고 밝혔다.

안재구씨 사건 조작의혹 AI, 즉각석방 요구

국제사면위원회는 3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사면위는 1일 안씨와 22명의 다른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혐의와 간첩혐의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위는 또 "이들이 안기부에서 수사받는 동안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보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초청 인권워크샵

- 일시 : 12월 3일(토) 오후 5시-8시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 내용 :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 국제연대(로케 로드리게스)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 한국의 역할(서준식)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캠페인 소개(오완호)
-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귀정추모 송년의 밤(전화 760-1381, 722-2003)

- 일시 : 12월 3일(토) 오후 4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종합강의동 1층식당
- 주최 : 김귀정 추모사업회/성대민주운동회

교도소 담을 넘나든 편지들

옥살이 삼십여년만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불행

김인수(대전교도소, 33년째 복역중) 씨가 민가협 회원들에게

유난히도 길었던 울 여름 잠 못 이루는 수 많은 열대야를 뚫고 어느덧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군요. 질 지내셨습니까.

늘 우리의 빛으로 믿음직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옥담밖 멀리 바라보이는 구룡산 연봉들이 푸른 옷을 다갈색으로 갈아 입더니 요즘은 그 색깔도 엷어져 단풍의 계절도 마감되는가 봅니다.

모진 설한풍 이겨내고 새작 띄워서 형형색색의 꽃향기 풍기고 무성한 잎피워 풍요한 열매 맺어서 사람들과 김승들에게 아무 댓가 없이 한없이 배풀기만 하고서 울긋불긋 단풍으로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고 다음세대를 위한 거름으로 마련하여 한줌의 흙으로 점순하게 되돌아가는 자연의 아름다운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 보게하고 있습니다.

작은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단풍든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저런 곳을 걷고싶고 수북히 쌓인 낙엽을 밟아보고 싶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11월1일부터 모든 재소자에게 집필이 허용되었고 내일 구입합니다. 모레가 되면 옥살이 삼십여년만에 처음으로 저의 소유로 된 불행물 가지고 방에서 기상에서 취침까지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불행 한자투와 노트 한 권이 가지는 의미는 비자유속의 자유,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질적 비약입니다. 이것이 박탈되었기에 시간은 많았으나 공부다운 공부를 밀도있게 하지 못한 아쉬움을 엄청나게 컸습니다. 기

뻘해 주십시오. 밖에서는 컴퓨터로 글을 적어내는데 이제 겨우 펜이라니 문명의 이기로부터의 소외야말로 가장 큰 형벌임을 절감합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들을 격려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뜨거운 배려해 주심에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의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달구벌, 빛고을, 비사벌, 안동 친구들과 각 곳의 젊은 친구들에게도 인사 전해주시고.

이곳은 여러분들이 염려해주시는 덕택으로 비교적 건강하게 잘들있습

이제는 중단되어야 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0일 오후5시 한양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가 여섯번째로 여는 '양심수를 위한 노래의 밤'이 10일 오후 5시 한양대학교 올림필체육관에서 열린다.

민가협은 "지난 공연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객들이 참여하는, 관객과 함께 만드는, 고통속에서도 감동과 기쁨이 배어나는 인간애를 그리고 예술작품으로서의 완결성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공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영화배우 문성근과 원창원이 만드는 김선명의 '마흔네번째 겨울'이다. 93년 국제사면위원회가 44년째 0.75명 독방에 갇혀 지내고 있는 그를 '세계 최장기수'라는 거창한 이름을 주기도 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김선명'이라는 한 양심수의 삶을 통해 민족분단의 뼈아픈 현대사를, 암울했던 세월을 가슴아프게, 희망차게 그려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또 노무현 전 의원의 사회로 '12.12 시민청문회'를 열어 이 사건의 부도덕성을 밝힌다. 청문회에는 79년 당시 국방부를 지킨다 공수부대원에게 사살된 사병(당시 병장)의 어머니, 5.18 광주항쟁에서 죽은 시민군의 아들, 12.12 군사반란의 고발인 등이 직접 출연할 예정이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46주년에 공연되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맞는 민가협은 양심수의 고난과 시련, 양심수의 아름다운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490명의 양심수를 모두 내놓으라고.

다. 하지만 워낙 감옥을 오래산 김선명, 안학섭선생들과 환자, 노약자, 고령자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곳에서 겨울은 가장 어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제작년도 아니, 20년 30년 40년간 극복해온 것 같아 을 겨울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있기에, 정역의 서러움과 원한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봄이 있기에,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서풍이 비치는 요즘 기대를 가지고 이 겨울을 이겨낼 것입니다. 곧 겨울인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94년 11월 김인수

할아버지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김태룡(대전교도소, 16년째 복역)씨의 외손녀 최미소양이 김선명(대전교도소, 44년째 복역중) 선생님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소라고 합니다. 설날 떡국을 먹어서 5살이 되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외할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줘서 편지쓰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처럼 아주 오래오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한다면서요? 할아버지도 임마가 맛있는 것을 잘 안 사주나요. 우리 엄마처럼 혼자서 아무데나 돌아 다니면 막 야단을 치나요? 할아버지는 어른인데 누가 야단을 치지요? 저는 막울면 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불이 없어서

손발이 뽕뽕 얼어 버린다면요.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지요?

할아버지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외할아버지도 볼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처럼 추운 방에서 혼자 있대요. 그래서 임마랑 할머니랑 같이 서울랜드도 구경가고 롯데월드도 구경가고 싶어요. 임마랑 같이 가봤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94년 2월 최미소 올림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동티모르 지지하는 국내 인권단체의 첫 연대행동

동티모르의 독립과 인권 실현을 위해 국내 인권단체는 2일 11시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첫 연대집회를 가지고 수하르트 대통령에게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수하르트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국제화와 세계화를 맞아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다른 민족과 국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류 양심이자 인권의 보편성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자나나 구스마오를 무조건 석방하고 유엔의 결의안과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존중하여 동티모르인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시급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인권협,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회원, 국제사면위 한국지부 회원등 40여명이 참가하여 자나나 구스마오에 대한 석방과 동티모르의 독립과 자유보장을 외치며 피켓팅과 전달을 나누어 주었다. 로케 로드리게스씨는 "동티모르인을 위한 모임에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오늘이 첫 집회는 미래의 회

망을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의서한을 전달받은 인도네시아 대사관 참사관 아르위스 아 무라드(Arwis A. MURAD)씨는 "인권협에서 알고 있는 동티모르에 대한 정보는 특

'셈'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움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소년단체 '셈'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 2시 서울 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검사는 셈의 이적성여부를 묻기 위한 증인신청으로 구속된 문영기, 김용우(21)씨를 비롯해 허준(상문고 3), 홍수진(영등포여상 3), 김지숙(동일여상 3)씨등 9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증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로 열리게 될 다음 재판에서 "증인들이 고등학생이고 방청객중 셈 회원들이 참석하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장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날 상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증인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셈사건 관련자들의 반

정세력으로부터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한편, "대사관 설립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집회"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집회를 막기위해서 영등포 경찰서 2개 소대가 동원되었다.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윤해미 교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필연적으로 아동학대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어떤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에 국가는 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우리사회의 복지과 미래를 위해서 결코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기습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아동학대예방세미나

제12회 한국아동학대예방세미나가 2일 프레스 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아동학대의 현황 및 대책에서 이영희(서울시립아동상담소) 소장은 학력위주의 사회구조에서 아이들을 자살로 몰고가는 입시경쟁 역시 사회가 주는 정신적 학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

은 보고 듣고 배운대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학대받고 자란 아동은 쉽게 학대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안동현 교수(한양대 정신과)는 혼육이 당연시 되는 우리사회에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학대의 판단근거는 동기, 행위, 결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실행가능한 최선의 현실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윤해미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필연적으로 아동학대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어떤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에 국가는 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우리사회의 복지과 미래를 위해서 결코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을 내놓은 이배근 조정관(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델로 한 이 시안에서 정부는 아동학대에 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내오고, 아동학대의 신고·조사·치료 등을 전담할 전문적인 아동보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티모르 독립지원하는 민간단체 연대와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운동 호소

로케 로드리게스씨 강연

동티모르의 앙골라 대사인 로케 로드리게스(Roque Rodrigues)씨가 방한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는 12월 1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오후 7시부터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는 제1부에서 동티모르 소개, 비디오 상영을 가졌고, 2부로 로케 로드리게스씨의 강연 "나의 조국, 동티모르, 고난과 희망의 20년"이란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강연을 벌였다.

고영구 인권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인류보편의 가치는 인권이란 점은 세계 공통의 인식이며, 진정한 세계화는 인권에 기초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동티모르와 비슷한 식민지의 경험을 가졌고, 독재에 저항할 때에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인민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인류 보편의가치인 인권의 실현을 위해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그것이 진정한 세계화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서 로드리게스씨는 동티모르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고 투쟁을 지원하는 인권협에 감사한다고 서두를 땀 뒤 주로 자신의 동

티모르에서의 생활과 투쟁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했다.

그는 "16세 때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동티모르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서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서 9년간 리스본에서 유학을 한 이후 곧바로 귀국하여 플레틸린(FRE-TILININ)에 가입했고, 낮에는 포르투갈의 군대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플레틸린의 활동가로서 임무를 수행한 경험을 얘기했다. 그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고 그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할 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동티모르 전체가 가난하지만, 농촌 지역의 가난은 아주 극심하였고, 이로부터 빈부격차를 증식시키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직후 인도네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티모르를 식민지로 두려는 음모를 진행하였는데, 75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군대는 네이팜탄과 화학무기를 이용하여 침략했고, 이에 대해

동티모르인들은 목숨 걸고 싸웠다고 전했다. 그로 인해 당시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가족 13명이 살해된 것을 비롯하여 모든 동티모르인 3분의 1인이 학살되는 일이 자행되었음을 증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략하기 직전 주 앙골라 대사관 임명되어 나이 26살의 나이로 동티모르를 떠나야 했다.

로케 로드리게스(Roque Rodrigues)씨는 산타쿠르즈 대학살사건(91년 11월 12일,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에 인도네시아 군대가 발포한 사건, 이 사건으로 사망 273명, 실종 255명, 부상 376명이라는 엄청난 참극이 일어났다) 이후 국제적인 여론이 동티모르의 독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92년 11월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 자나나 구스마오가 딜리(동티모르의 수도)에서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자나나는 동티모르의 만델라다.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해 자나나는 석방되어야 한다. 그의 석방을 위해 인권협이 압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작지만 자원이 풍부 한 동티모르를 강제로 강점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강대국들이 공모하고 있다고 미

국 등을 강력히 비난했고, 앞으로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국제민간단체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올해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회의는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고협 성명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공동의장 고철환등, 민고협)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정상환교수와 정진상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함에 대해 "공안당국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민고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양식을 회복하여 해당 교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도를 포기할 것을 기대"해 왔으며, 검찰당국의 이번 초저가 "정치적 저의를 띠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민고협은 또 기소된 교수들의 "협약이 터무니 없는 것임을 입증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기본권의 최후보수인 사법부가 이 사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티모르 관련자료 모음'(인권협 발간) 소개(북자)

수록내용
· 동티모르(East Timor):고난받는 민족, 공모하는 국제사회 - 서준식(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1994, 제3호, 역사비평사) // · 약소국에 있어서 국제사회란 무엇인가? - 동티모르 외교활동의 경험 - 마리 알카티리 초청 인권운동사랑방 특별세미나, 93년11월 // · '산타 크루즈' 대학살과 동티모르의 독립투쟁 - 이성훈, 94년1월, 월간 「달」 // · 호세 라모스 호르타 인터뷰 - <인권하루소식> 94년 2월 16일(104호) // · 동티모르 관련 사건 연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자료집,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 93년 // · 동티모르의 분노 "강대국들 너무합니다" - 한겨레21, 1994년 6월 2일 // · 일간신문 기사모음 문의전화 : 522-7284 / 796-8364(총 56쪽, 값 2천원)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초청 인권워크숍

· 일시:12월 3일(토) 오후 5시-8시
· 장소: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 내용:동티모르 인권과 독립, 국제연대(로케 로드리게스)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 한국의 역할(서준식)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캠페인 소개(오완호)
· 주최: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귀정추모 승년의 밤(전화 760-1381, 722-2003)

· 일시 : 12월 3일(토) 오후4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종합강의동 1층식당
· 주최 : 김귀정 추모사업회/성대민주운동회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

· 일시 : 12월 5일(월) 오전11시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 주최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단체탐방 37 /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인제나 병원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진찰을 받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적어도 어려서부터 몇 번쯤은 둘러봤으련만 매번 낮설고 병원 현관문을 밀기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왜냐.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말처럼 의사나 병원에 대한 불신감이 알게 모르게 우리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불만들은 치료를 받는 사람들만의 문제의식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 문제점은 당사자인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공감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의료개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 농약과 농기계로 인한 중독사고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농촌, 수시로 일어나는 질병과 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작업장의 노동자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숭고한 정신을 한 평생 삶의 뜻대로 삼고 살아가려는 의사들이 모임을 시작했다. 이런 소박한 실천은 87년 '호헌철폐' 서명에 1백37명이 서명하는 계기를 맞아 "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리고 드디어 서명자들을 중심으로 인의협 준비위원회가 생겼고 그해 11월 21일 인의협이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인의협과 같은 모임을 손꼽아 왔다는 것은 창립전에도 쏟아져 오는 상담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담전화는 한달에 무려 3백통을 넘어가까지 했다. 때를 기다려 왔다는 듯이 마구 일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은중독으로 숨진 문송면군의 죽음을 비롯해 88년에는 유별나게 중금속노출로 숨겨간 이들이 많았던 때였다. 같은 해 상봉동 연탄공장 인근 주민에게 처음 발견된 진폐증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진폐증이 직업병만이 아닌 환경병으로 새롭게 인식된 데에는 인의협의 발로 뛰는 수고도 있었다. 89년 4월 인근 미공군 사격장의 폭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느낀다는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주민들의 집단 호소가 들어왔다. 89년 5월 고 이철규의문사 사건은 정국에 파문을 던졌고 인의협은 '이철규의 의문사 사건에 관한

인의협의 견해'를 발표한다. 90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선로원들에게 발생한 납중독 사건에 대한 학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적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고 91년에는 원진레이온 고 김봉환씨의 직업병 인정과 산재추방을 위한 노력을 연대사업으로

국민건강권 획득을 위한 현장의 몸부림

적극 펼쳤다. 이처럼 전문성을 통한 인의협 회원들의 광범위한 사회 참여는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졌다.

독립문의 기상을 담고 있듯 독립공원 맞은 편 시장골목에 자리한 인의협은 공동대표로 조한의(교직의 대표)·홍영진(봉직의 대표)·배기영(개업의 대표)·원제환(전공의 대표)씨가 맡고 있다. 조직체계로는 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국장단회의, 각도지회 및 지회건설준비위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 실무부서로 기획국, 조직국, 사무국, 대외사업국, 출판국, 학술국이 있다. 조직국 산하 정책실에서는 3대 연구주제로 지방자치제와 보건 의료, 우투파이라운드와 보건 의료, 통일과 보건 의료를 설정, 연구작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외사업으로 진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소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출판국에서는 국민에 대한 보건교육의 하나로 『잘못된 건강상식 100』(한울출판사 펴냄, 94) 『장애인의 권리』(인의협출판사 펴냄)을 펴냈고 곧이어 『꼭 알아야 할 건강상식 100』을 펴낼 계획이다. 그리고 월간 신문 <인의협 소식>을 펴내고 있다. 이밖에도 인권협 비정규직으로 '전공의 직업병 발표', '한국 근대의학의 역사'등을 진행하였다.

의료운동에 있어 최종 지향점은 어디일까. 김종구 조직국장(사당의원 원장)은 "건강문제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국민건강권 쟁취가 중요하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소외층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보건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대부분의 의료사업이 민간에 치중되어 있는데 보건소 같은 공

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환경문제의 심각성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없애는 사업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권 확보 속에서 인의협은 9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건 의료정책을 내오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법'쟁취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햇수로 8년째 1백30여명의 회원이 9백50명으로 늘어난 의형적 변화 외에도 '인의협'이 국민들에게서 알려지면서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너머 산이라고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다. 초창기 멤버인 김종구씨는 인의협 사업중 겪는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조직화 사업이라고 우선 순위를 꼽았다. 의사라는 직업이 시간을 내기가 딱딱한 직업이라는 것과 다른 직업과는 달리 개인적 성향이 강한 것이 어려움으로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창기 고민했던 의사대중운동이 과연 가능한가는 것은 아직도 첫번째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아쉬움도 많았다. 91년 5월 박창수열사조사단 활동을 벌였는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몇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한다.

인의협의 어깨에 드리운 과제는 앞서 말했듯이 국민건강권 획득이다. 의사라는 직업때문만은 아닌데 아직도 보건 의료정책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우리들 역시 교육·교통·주택문제를 시급하다고 보았지만 국민건강권문제의 절박성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서 김종구씨의 부탁은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의료제도에 대해 관심과 지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의협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 건강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길을 오늘도 꾸준히 가고 있다.

주소 : 서대문구 영천동 69-4 2층
전화 : 362-0377, 8 / 팩스 : 362-0378

<인권하루소식 김수경 기자>

인권하루소식

합본 III 색인

(제201호 - 제300호)